



현 정세와 좌파의 과제
**긴축 반대 투쟁과
'점거하라' 운동**

▶ 8~9 면

마이크 데이비스
**월가 점거 운동의
역사적 의의**

▶ 12 면

그리스·이탈리아
**심화하는 위기와
대안 논쟁**

▶ 10, 11 면

'희망버스' 평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다**

▶ 5 면

이란 공격설
**미국과 이스라엘은
무엇을 노리는가**

▶ 13 면

발행인_김인식 편집인_김재현
인쇄인_ (주)이피디 이송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97

Left21.com

제69호 | 2011년 11월 19일 ~ 12월 3일 | 값 1,800원

레프트21

이명박 사기·꼼수에 질렸다

NO! 한미FTA

될 때까지 모아자

» 관련 기사 3, 4면

한미FTA 반대 운동이 이명박 정부의 비준 안 강행 시도를 연거푸 좌절시키며 전진하고 있다. 이명박은 G20 정상회담에 이어 아펙 정상회의에도 빈손으로 참가했다.

“뺏속까지 친미”인 이명박과 그런 이명박을 철썩같이 믿었던 오바마의 어색한 만남을 생각하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다.

운동이 성장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10월 23일 조사에서 33퍼센트이던 한미FTA 반대 여론은 11월 5일 40퍼센트를 넘어섰다.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검찰은 ‘괴담’ 유포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다가 역풍만 맞았다.

한나라당조차 “시대착오”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하루 만에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고 꼬리를 내렸다.

집회 분위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어설픈 대응과 무기력까지 2008년 촛불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한미FTA 반대 주장이 괴담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1퍼센트 부자를 위해 나머지 99퍼센트를 희생시키는, 친미적이며, 부패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이명박 정부가 이토록 절박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한미FTA에 거부감을 갖게 된다. 이런 정권이 한미FTA는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들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더구나 2008년 시작돼 지금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경제 위기 때문에, “한미FTA를 통해 수출뿐 아니라 투자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명박의 호언장담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위기에 빠진 미국의 집만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

다는 점 때문에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도입” 하자는 한미FTA 추진 명분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 이집트 혁명에서 시작해 월가 점거 시위로 이어진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저항 덕분에 한미FTA 반대 투쟁이 새로운 동력과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 투쟁이 불의와 착취,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전 세계적 투쟁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노동자대회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 점을 강조했다.

“영원할 것 같던 시장만능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는 미국 심장부에서부터 파산 선고를 맞았으며 분노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세계화됐습니다.

“한미FTA 논쟁의 본질은 양국간 무역을 통

한 손익계산이 아닙니다. 한미FTA 반대 투쟁은 우리 사회가 고장 난 미국식 신자유주의 희생양이 될 것이냐? 노동 존중과 민중 복지의 새로운 사회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미래에 대한 투쟁입니다.”

▶ 3면으로 이어짐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촛불 대회**

**11.19 (토) 오후 6시
서울시청광장**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누구의말일까요?

사르코지: “더 이상 그를 참지 못 하겠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오바마: “당신은 그에게 싫증을 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를 매 일 상대해야 한다.”

뒷담화 까이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데 [미국] 상· 하원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사인해 달라고 하더라. ... 한국 대통령 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이명박, 한국 국민에게 미움 받고
미국 지배자들에게 사랑받고

“별 1개를 준 것은 별 0개를 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

세계 최대 인터넷서점 아마존의
이명박 자서전에 달린 댓글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퇴임 후 구속 대비 묵비권 연습?

“제가 그때는 귀신에 올렸나보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고공 대박' 발언 사과하며

“이전 날치기가 아니라 얼치기 다. 너무 느리다.”

이상득의
'닥치고 FTA 날치기' 정신

“FTA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죽는 때이자 장소이며, 이를 통해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한나라당 안형환

“개가 사람을 물려다 실패했다.”
한 네티즌, 김진숙 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나라 팔아먹자고 굶는 X는 니가 처음”
한나라당 정태근 단식에 대한
네티즌 반응

“시장 사퇴해. 이 빨갱이 새끼야! 김대중x의 앞잡이”
박원순을 구타한
'어버이연합' 회원(?)

“총기소지만 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싸 죽이고 싶은 게 강기갑하고 이정희입니다. ... 그리고 감옥 가면 되지 뭐가 걱정입니까.”
FTA 찬성 어버이연합 집회의 연사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각주 금요일 저녁 7~8시 (다음호는 12월 3일)

강남역 10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충각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넌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 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특종 – 이집트 혁명가 아흐메드 인터뷰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집트 단체 ‘4·6 청년운동’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아흐메드 마헤르 이브라힘 엘탄타위 (사진)가 ‘2011 서울 민주주의 포럼’ 참석차 11월 7일 한국을 방문했다. 아흐메드는 자신이 무바라크 정부의 탄압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한국에서 ‘다함께’가 주도해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이집트 민주화 운동 지지 시위를 벌인 것에 큰 감사를 보냈다. 그는 “다함께와 한국 단체들의 이집트 민주화 운동과 혁명 지지 활동이 이집트 신문에 빠짐없이 보도됐다”며 그것이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이집트 혁명은 아직 목표한 것을 다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타흐리르 광장을 점거하고 무바라크 정권을 타도하기를 바랐고, 우리는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무바라크 개인을 몰아내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질서를 바꾸기를 원했고 사회정의의 바랐습니다.

이집트 민중은 이것을 성취하려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적 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부분의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들을 결성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를 통치하는 이집트 최고 군사위원회는 이런 움직임의 가로막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52년부터 이집트를 통치해 온 군부가 정치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그들은 다가올 선거에서 옛 무바라크 정권 인사들과 자신과 타협한 후보들이 최대한 많이 당선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결모양은 공정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바라크 정권 인사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정당과 같이 군부와 종종 타협하는 ‘실용주의적’ 정당들이 많은 표를 얻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회의 혁명

이집트 혁명가 아흐메드

2006년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이집트 민주화 운동에 연대한 다함께

적 변화를 바라는 혁명가들은 단지 적은 표단 얻기를 것입니다.

다른 한편, 군부는 10월 9일 콥트 교도 공격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민중을 이간질하려 합니다. 물론 이집트에는 콥트 교도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며 이번 사건은 이들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상은 간단합니다. 군부가 의도적으로 콥트 교도 시위대를 학살한 것입니다. 군부가 죽인 26명 중에는 ‘4·6 청년운동’ 회원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집트 군부가 진정한 정

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집트 민중은 날이 갈수록 최고군사위원회의 진정한 실체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콥트 교도들은 종교적 권리를 성취하기 위해, 무슬림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서로 단결해서 군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혁명 이후 노동자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바라크 정권 아래 진정한 노조 활동은 보장되지 않았습니 다. 지금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조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최고 군사위원회는 새로운 노조 결성 움직임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무바라크 정부와 비슷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최근 대규모 파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의와 평등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싸우고 독립적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진정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모든 이집트인이 사회정의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4·6 청년운동’이 바라는 사회정의와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원하는 사회정의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복지, 교육을 바라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이 보장되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단체들이 이 요구를 쟁취하는 데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뉴욕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외에도 타흐리르 광장 점거에서 영감을 얻은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다양한 운동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평등을 바랍니다.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의 투쟁, 유럽 스페인과 그리스의 투쟁, 지금 뉴욕 월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청년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다양한 운동들은 서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운동도 이런 움직임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 도울 수 있습니다. 다함께와 한국의 단체들이 이집트 활동가들을 도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4·6 청년운동은 이집트에서 역사적인 마할라 쿠브라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무바라크 독재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전 이집트인들의 총파업을 2008년 4월 6일에 벌이고 했기 때문이다. 아흐메드는 이 단체가 페이스북 등에서 벌인 활동이 큰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인터넷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층에 뿌리를 내린 운동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조직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뷰·정리 김용욱

〈뉴데일리〉의 음해·왜곡에 답해

‘투쟁에 빠짐없이 앞장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일 뿐이다

이 글은 11월 15일 ‘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을 축약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위기와 분열이 건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익들은 위기감 속에 발버둥치며 진보진영을 공격하고 있다.

우익 인터넷 언론 〈뉴데일리〉가 다함께를 마녀사냥하려 한 것도 이런 공격의 일부다.

〈뉴데일리〉는 지난 11월 14일 “‘다함께’의 정체는? 숙주 자살계 하는 ‘연가시’?” 기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벌어진 “주요 폭력 시위”, 즉 2005년 APEC 반대 시위, 2006년 평택 미군기지 반대 시위, 2008년 촛불항쟁, 2010년 G20 반대 시위, 그리고 올해 희망버스, 반값 등록금 시위와 지금의 한미FTA 저지 투쟁 등에서 다함께가 “빠지지 않고 ... 선봉에 서다시피” 했다고 비난했다.

그래서 다함께가 “운동권 내부에서 점점 그 영향력을 키워 가고 있”고 “좌파 진영에서 유력인사이거나 실질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가는 이들이 ‘다함께’와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데일리〉는 다함께가 진보진영과 진보운동을 ‘숙주’로 삼다가 결국 ‘숙주의 생식 능력을 잃게 만든 뒤 뇌를 조종해 자살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매도했다. 기사 조회 순위까지 조작하며 보수적 선동에 동참해 온

포탈 사이트 네이버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마녀사냥식 보도를 메인 뉴스캐스트에 게재해 힘을 보탤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벌어진 주요 투쟁들에서 ‘빠지지 않았고 주도적으로 선봉에 섰다’는 것은 다함께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없다. 투쟁에 대한 헌신 덕분에 ‘진보진영’에서 다함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진보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다함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함께에게 이것은 오히려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런 일이다. 이 투쟁에 대한 우리의 기여가 우익을 위협할 정도였다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반동적 정책에 맞선 투쟁을 앞으로 더욱 더 확대·강화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영광스런 일

물론, 〈뉴데일리〉의 왜곡과 음해는 황당하지만 하다. 〈뉴데일리〉는 한미FTA 저지 투쟁 등을 소수 급진 좌파의 “과격”, “폭력”으로 매도한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은 지금 수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으며 전진하고 있다. 이 운동은 1퍼센트 재벌·부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빼앗길 수 없다는 99퍼센트의 정의로운 저항인 것이다.

다함께가 “소련이나 북한을 ‘실패한 사회

주의’로 보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지지”하는 “국제 불세비키 그룹에 가깝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 다함께는 그동안 북한이 남한과 마찬가지로인 억압·착취 체제이며 “지도자를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말해 왔다. 북한 핵이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낡은 위험한 결과”이지만 “핵무기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해 왔다.

〈뉴데일리〉는 또 다함께가 “불법 체류자 지원센터까지 장악”했다며 거품을 물었지만, 단속·추방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는 것은 국제주의의 자로서 당연한 의무일 뿐이다.

〈뉴데일리〉음해·왜곡의 하이라이트는 다함께가 “이명박 정권 퇴진”, “잘못된 자본주의” 등을 주장하며 진보진영을 “극좌주의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1퍼센트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와 고장 난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함께의 반자본주의적 주장과 대안은 진보운동의 전진에 도움이 되지 그 반대가 아니다.

〈뉴데일리〉같은 우파들은 이런 음해·왜곡을 통해 진보진영을 이간질하고 좌파를 고립시켜 투쟁의 힘을 빼고 싶겠지만, 이런 시도는 비웃음만 살 것이다.

한미FTA 비준을 세 차례나 저지하며 전

진하는 진보운동은 이런 음해와 이간질에 흔들릴 정도로 취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함께도 이 운동 속에 헌신해 왔고 최근 다음 ‘아고라’에서도 다함께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함께 “믿어도 될 것발”로 거론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하고 강력한 투쟁 건설을 계속할 것이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11월 19일(토) 오후 6시
서울 시청광장
한미FTA 저지 촛불대회
주최 한미FTA 저지 범국민

11월 24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
주최 한미FTA 저지 범국민

11월 26일(토) 오후 6시
서울 시청광장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
주최 한미FTA 저지 범국민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 1면에서 이어짐

이처럼 대중운동의 성장이 여론을 바꾸고 다시 운동의 자신감과 사기가 높아지는 패턴은 2006~2007년 한미FTA 반대 투쟁이나 2008년 촛불 항쟁에서도 거듭 나타난 바 있다.

반면 한미FTA 정점이 국회 내에만 머무르던 시기에는 한미FTA 반대 진영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국회와 언론이라는 무대에서는 1퍼센트 기득권 세력과 자본가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이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민주당이 여기에 끌려가며 그 정도 타협이라도 차악으로 받아들이라고 민주노동당에게도 강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진영은 절대 국

회만 바라봐야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없다. 한나라당이 11월 24일 강행처리를 시사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리의 투쟁을 확대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민주당을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민주당은 거듭 동요했다.

정권 퇴진 투쟁

둘째, 민주당이 감히 이명박의 손을 잡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을 거리의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하고, 위력적인 거리 행진도 필요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한복판에 서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07년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처럼 말이다. 한미FTA가 정조준 하는 게 바로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한미FTA가 비준되더라도 나중에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다음 선거까지 몇 달을 기다리며 모든 일들이 잊혀지고 감이 빠지길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자대회 대회사에서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이 망국적 FTA를 날치기 처리할 경우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결의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한미FTA 비준을 이명박 정권의 사망선교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최근 민주당 정동영은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는 세력은 민주진보통합정당에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천정배는 “2008년 촛불처럼 들불처럼 일어나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라며 투쟁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반성의 말을 쏟아 내며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히 끈질기게 한미FTA 반대 운동을 건설해 온 진보진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래 급격히 분출한 촛불의 힘 때문에 바로 얼마 전까지 타협을 모색하던 민주당이 감히 한미FTA 비준에 협조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은 여전히 한미FTA 비준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

김성곤, 강봉균 등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해, 한미FTA 비준 후에 미국과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ISD)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자며 절충안을 내놔다.

이것은 지난 10월 31일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가 한나라당과 합의했다가 욕먹고 철회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2중대”, “국공합작”이라는 한나라당과 우파의 비판에 압박을 받고 있다. 자신들의 주요 기반인 기업주·부자 들이 한미FTA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진보 계열 대중의 거센 압력을 받

며 눈치 보고 동요하고 있다.

이명박이 11월 15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FTA 비준 후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이 틈을 노린 것이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내분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 한나라당을 단속하려고 꿈을 쓴 것이다.

운동의 성과

그러나 이명박의 제안은 “파격적인 새 제안”(홍준표)이기는커녕 하나 마나한 조삼모사식 꿈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나를 못 믿느냐”는 이명박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이 나라에 이명박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다. 일단 민주당도 이 제안을 조건부 거부했다.

그럼에도 한미FTA 자체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독소조항만 재협상하자는 민주당은 앞으로 얼마든지 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 미국에게 ‘재협상 서면합의’를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요구가 타협의 통로가 될 지 모른다.

따라서 민주당 우파의 압력을 막아내고 민주당이 감히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더 큰 대중적 압력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시농만 하면서 사실상 표적 처리를 묵인하는 게 아니라 “몸싸움을 하며 막을 수밖에 없게”(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은 한미FTA 폐기 주장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의 타협 시도를 비판·폭로하면서 거리의 운동 건설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강동훈

이명박의 ‘비준 뒤 재협상’ 제안

“일단 도장부터 찍자는 건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민 정책자문위원이 이명박의 꿈수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한미FTA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4면을 보시오.

“미국 정부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협정문에 적힌 대로 실행하겠다고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협정 발효 3개월 이내에 첫 회의를 연다는 것조차 협정문에 명시돼 있거든요.

또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상 촉진 권한(TPA)이 만료됐어요. 이제 대외무역 협상권이 행정부에서 원래대로 미국 의회로 넘어간 거죠.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이명박의 제안에 화답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논의의 내용도 문제가 됩니다. 재협상 결과 오히려 한미FTA 협정문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것 아닙

니까?

백보양보해서, 비준 후 ‘협의’ 과정에서 ISD를 폐기한다고 해도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한국을 무역재제 할 수 있어요. WTO에 제소하면 되거든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일단 도장부터 찍으면’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 아닌가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꿈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11월 16일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빼고는 이명박의 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중행동을 성장시키려는 방향이 분명해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본)가 10월 초에 한미FTA 비준안 저지 농성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진보진영에는 “어차피 10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체념이 많았다. 그러나 그 후 한미FTA 반대 운동은 이명박의 강행처리 시도를 세 차례나 막아 냈다. 한미FTA 저지 농성을 주도했던 한국진보연대 활동가들의 헌신성과 노력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물론 얼마 전까지 범국민본은 대중적인 저항 건설보다는 국회 대응과 민주당에 압력을 넣는 데 강조점을 두며 소수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0월 말부터 촛불이 커지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범국민

본은 이런 대중적 저항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에 분명한 강조점을 뒤야 했다.

이를 위해 범국민본 상황실도 농성 실무 지원을 넘어서 이제 대중운동 건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더 개방적, 협력적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을 참가시켜야 한미FTA 반대 운동을 더한층 성장시킬 수 있다. 2008년 촛불항쟁 때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상황실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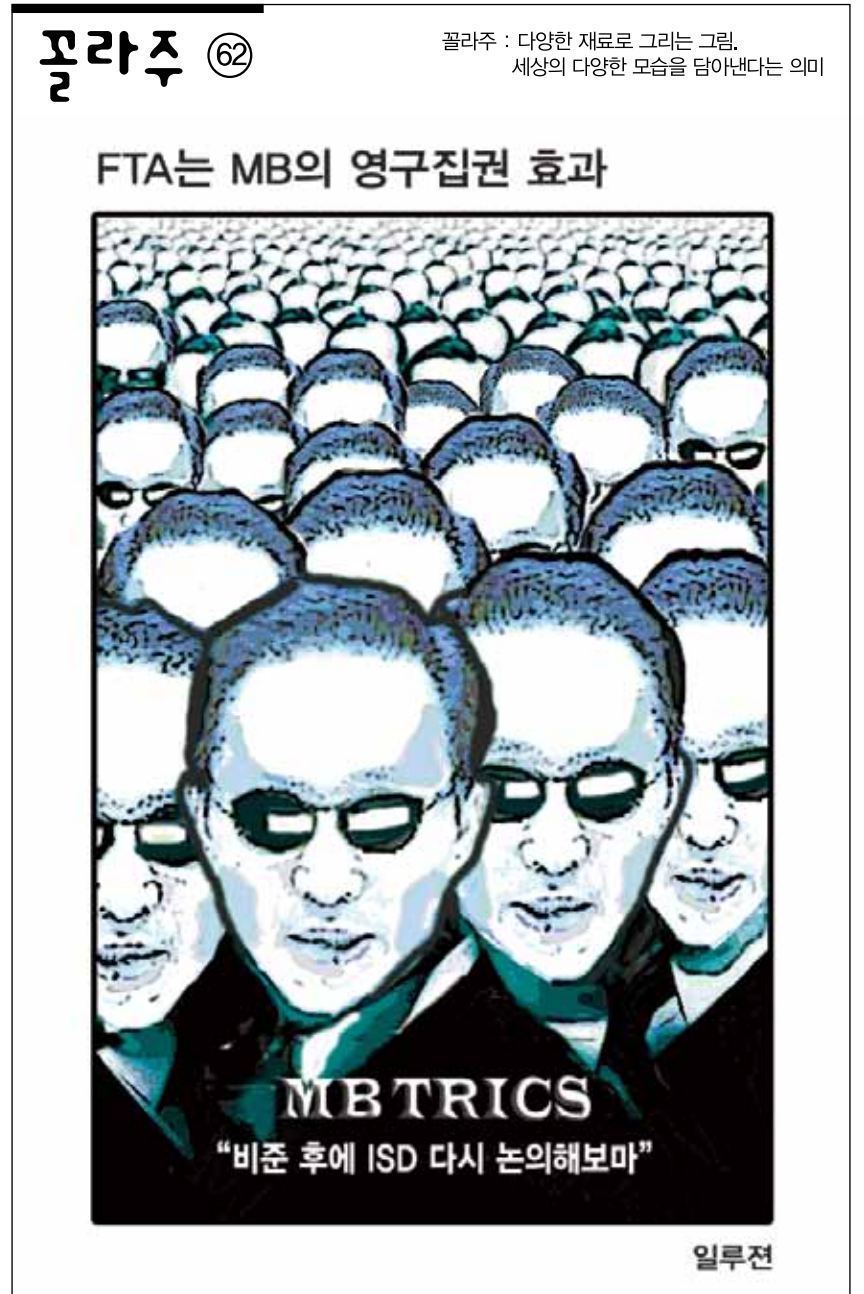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진보연대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국회 대응과 민주당과의 공조에 강조점을 두며 이런 방향 전환에 소극적이다.

일부 시민단체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오히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

회의의 상황실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한 게 문제였으며 범국민본 상황실을 실무 처리 단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협력적으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 상황실에 파견돼 헌신적으로 일하는 활동가들을 단순 실무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

2008년 촛불항쟁 때도 민주적, 협력적 방식으로 대중행동을 확대하기보다 적정 수준에서 운동을 통제하고 제도권으로 공을 넘기려 했던 것이 진정한 문제였다. 커지는 대중적 분노와 행동을 더 발전시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최영준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민 정책자문위원을 만나 운동의 쟁점과 과제를 들었다. 우석균 자문위원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자 의사로서 2008년 촛불항쟁 등 주요 사회운동에서 큰 공헌을 해 왔다. <레프트21>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Q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반대 주장을 ‘괴담’이라고 비방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괴담입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공공정책이야말로 ISD의 주된 대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영역이 뭐겠습니까? 거꾸로 공공정책을 제외하면 정부가 어떻게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겠습니까? ISD는 기업이 국가의 공공정책에 맞서는 무기입니다.

정부는 필수 공공정책은 협정 발효 이후에도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미래유보’라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같은 물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한 10년쯤 있다가 ‘아, 이건 문제가 있네’ 하고 다시 국유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에 국내 물 시장에 진출했던 미국 투자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계약으로 한국 물 시장에 투자했는데 그중 20년치 이익을 보상하라’ 하고 말이에요. 이걸 ‘수용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액수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냥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주겠다고 하면 ISD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미래유보’ 조항에는 ‘수용 보상’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사실 ISD가 적용된 사건의 80퍼센트가 이런 ‘수용 보상’, 혹은 ‘최소기준대우’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최소기준대우’는 이런 겁니다. 미국 투자자가 보기에 한국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가 ‘관습적’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관습적’이라는 게 딱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최소기준대우도 미래유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은 어떤 공공정책에 대해서든 최소기준대우를 어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자동 동’ 조항이 있습니다. 1994년 NAFTA 이후에 생긴 겁니다. 한국 정부는 ISD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걸면 걸리는 것이죠. 언제든 중재 재판에 끌려 나가요 합니다.

요컨대 일단 개방한 것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고(역진방지 조항), 되돌릴 수 있도록 예외로 해 놓은 것은(미래유보 조항) 수용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을 안 하면 ISD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장하준 교수가 “이혼할 수 없는 결혼”이라고 지적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Q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ISD 재협상만 약속하면 한미FTA를 비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ISD만 문제 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ISD는 정부가 한미FTA 협정을 어겼을 때 이를 강제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안 되는가 하는 내용들은 한미FTA 협정 자체에 담긴 것입니다.

ISD가 지독한 제도이기는 해도 이것



11월 13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한미FTA 반대 운동은 '99퍼센트 행동'과 결합되고 있습니다. 운동의 지도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기층운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만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ISD가 없어져서 미국 투자자가 제소할 수 없게 되면 미국 정부가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제소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처럼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지요.

예컨대 한EU FTA에는 ISD가 없죠. 그런데 통상교섭본부장 김중훈이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상생법이 한EU FTA 위반이라고 했잖습니까? 영국 정부가 홈플러스 지분을 가진 영국 기업 테스코를 대신해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는 겁니다.

Q 구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공공서비스가 ISD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한국에서 도시가스는 도매는 일부, 소매는 거의 다 민영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스 공급업체 32곳 중에 GS와 칼텍스와 SK가 40퍼센트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GS의 경우 GS칼텍스가 지주회사인데 지분 절반은 전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대주주로 있는 칼텍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가스요금은 시장에 내맡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조례에

서 정합니다. 지나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죠.

자, 이제 한미FTA가 발효되고 나면 콘돌리자 라이스가 뭘 할까요? 가스요금 이 안 올까요? 지방정부는 그럴 막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미 한국 정부가 가스요금 현실화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미FTA에서는 한국 발전 ‘시장’의 30퍼센트만 개방한다고 해 봤습니다. 마치 미국 투자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국의 발전회사는 5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두 개를 소유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금을 올릴 수 있죠.

애당초 지역이나 운영 효율 같은 것을 따져서 발전 회사를 나눠 놓은 게 아닙니다. 민간에 팔기 적당한 크기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해 놓은 일이지요. 완전히 민영화 하려다가 2002년에 철도·가스·발전 3사 파업으로 노동자들이 싸워서 이 상태로 막아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FTA와 한국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조치가 결합될 때 가장 큰 파괴력이 생깁니다. 정부의 국책연구소들과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민간 연구소들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크다”고요.

Q 영리병원 확대나 약값 폭등도 모두 ‘괴담’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죠. 한미FTA 체결 당시 경제자유구역은 제주도를 포함해 4곳이었습니다. 지금은 7곳이고요.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충북과 강원도에도 경제자유구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미FTA와 한국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가 결합되는 거죠.

게다가 병원이나 학교 같은 것들을 영리화하면 그 효과가 경제자유구역 경계선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파급효과로 다른 병원의 의료비가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또 이른바 역차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외국 투자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고 한국 투자자는 못 하게 하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논리로 한국 정부가 스스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국 투자자들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특히 만료되는 약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인 주장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특허신약들은 없으리라는 이야기인가요? 정부는 약값 인상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한국의 약값 지출은 이미 OECD 평균의 1.4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통과되면 정부가 강제로 약값을 낮추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한미FTA 발효 이후에 약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40퍼센트나 인상된다고 계산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한국보다 느슨한 협정을 맺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FTA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면 매년 30퍼센트씩 예산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하는데 한국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일본이 미국과 TPP 협정을 맺으려 하는 것이 한미FTA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던 일본이 세계 1위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는 것을 두고, 한참 뒤쳐지는 한국과의 경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한미FTA도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하는 데에는 지정학적 고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진스키가 《거대한 체스판》에서 일본을 아시아 끝자락에 놓은 미국의 횡대(미국의 상징인 독수리가 앉을 수 있는)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요. 일본 지배층 일부는 스스로 이런 구실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아시아에서 구현하는 구실을 맡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들이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적 중심으로 남으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중국은 ‘한중일 + 아세안’ 무역협정으로 자신들

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죠. 이미 한국은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을 놓치고 단지 한일 간의 경제적 경쟁으로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PP는 오바마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신통상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 40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늘려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애긴데요. 부시 정부보다 오바마 정부가 더 공격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린공화화, 즉 미국의 경제 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떠넘기겠다는 거죠. 미국은 일본에게도 TPP의 선결과제로 자동차, 쇠고기, 농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일본 지배층은 분열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남는 장사인지 이견이 있는 거죠. 그러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Q 한미FTA 반대 투쟁 내에서는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 한미FTA 반대 투쟁의 중심에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그랬구요.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파업을 결의했고 실제로 급속노조는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당시에는 전농 같은 농민조직도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전투적이었는지 국회 앞 시위에서 농민 두 명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농업 분야야말로 한미FTA의 직격탄을 맞게 될 판인데 말이지요.

사실 지금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것을 노동자들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더딘 것이죠. 당시와 달리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객관적 요인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체적 문제입니다. 진보정당은 분열돼 있고 운동의 중심이 민주당과의 연대에 가 있죠. 요구 수준도 민주당 수준으로 후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민주당과 같이 싸우기는 하되 한미FTA 폐기 요구를 분명히 하고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지켜냈다면, 아마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거리의 운동이 여전히 한미FTA 반대 투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이나 내일이냐 하며 국회만 바라보고 운동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뒤편에 미뤄 두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만에 하나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이를 폐기하려면 지금 대중적 선전과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과거보다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07년과 달리 정부의 국익론 같은 것이 힘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퍼센트 대 99퍼센트 같은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죠. 따라서 운동의 지도자들이 좀더 자신감을 갖고 기층운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낸 ‘희망버스’ 투쟁

마침내 희망버스 투쟁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다. 남아 있는 한진중공업 해고자 94명 모두가 공장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받았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 위에서 내려와 3백9일 만에 살아서 땅을 밟았다.

이것은 희망버스의 승리고, 우리 모두의 승리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살리고 한진중공업 민주노조를 살린 게 희망버스입니다. 잊지 맙시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노동자들은 많은 것을 얻어냈다. 1년의 유예기간과 퇴직금·학자금을 따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해고 전 근속년수를 인정받았고 유예기간 동안 생계비도 받게 됐다.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을 구속하려던 검찰의 시도도 보기 좋게 좌절됐다. 심지어 한나라당 홍준표조차 ‘눈치 없는 검찰’을 비판했다.

이 때문에 경총은 “기업의 정리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성과로 인한 대중의 사기 진작과 다른 작업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와 희망버스라는 두 가지 전선에서 싸우기가 곤혹스러운 처지였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최종 교섭엔 청와대 관계자까지 직접 참가했다. 지난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륭전자·동희오토 투쟁이 승리한 것과 비슷한 사례다.

청와대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태는 한진중공업 사측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사측은 2월 14일 1백70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이에 맞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한부 파업 등을 시작했고, 올해 2월 2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파업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채길용 집행부가 생산에 직접 타격을 주지 않는 ‘이상한 파업’을 조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측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비정규직을 동원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노조 지도부는 ‘쌍용차처럼 강력히 싸우면 패배한다’며 조업을 막고 선박을 점거하길 회피했다. 비정규직을 노조로 조직하며 연대하려 하지도 않았다. 안타깝게도 전투적인 현장 활동가들도 노조 지도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길 주저했다.

그러는 동안 적잖은 노동자들이 무력감에 빠져 파업 대열에서 이탈했다. 배가 완성되면서 비정규직도 해고됐다. 노조 지도부는 소득도 없는 교섭에 매달리며 이를 막지 못했다. 압박한 상황에서 노동자 수백 명이 희망퇴직으로 공장을 나갔다.

1월 5일, 상황을 지켜보던 김진숙 지도위원은 2003년에 김주익 열사가 목숨을 끊었던 85호 크레인에 올랐다.

그러나 채길용 집행부는 김 지도위원의 고공 농성이 “교섭을 어렵게 한다”며 불편해 했고, 급기야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적 타협을 하고는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1차 희망버스가 감동적인 연대의 꽃을 피우고 사회적 지지가 넓어지던 바로 그때, 오히려 찬물을 끼얹으며 사측·정부에 투항했던 것이다.

그러나 희망버스 기획단은 단호하게 채길용 집행부의 배신을 비판하며 2차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11월 10일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오며 승리를 기뻐하는 김진숙 지도위원

희망버스에 시동을 걸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경이로운 투지가 노동자들의 행동을 대신할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던 상황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응원한 것은 바로 희망버스였다.

희망버스는 ‘연대 투쟁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그리고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고 외쳤다.

희망버스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분노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이 투쟁은 연대성이 약화된 노동조합 운동의 공백을 메우며 순식간에 전국적 운동으로 부상했다. 1차부터 5차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3만여 명이 버스에 올랐다.

‘피도 눈물도 없는 더러운 세상’에 대한 분노가 희망버스로 결집했다. 노엄 촘스키 등 세계적 저명 인사들과 단체들까지 희망버스에 찬사를 보내고 환호했다. 이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은 이 놀라운 힘에 위협을 느꼈다.

위협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무차별적으로 참가자들을 연행하며 불씨를 꺼뜨리려고 간간히 힘을 썼다. 희망버스가 낸 집회신고는 모조리 반려됐다. 두 명이 수배를 당했고, 4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장을 받았다. 우파들은 ‘해방버스’, ‘절망버스’라는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나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송경동 시인은 4개월의 수배생활까지 견디며 투지를 불태웠다.

한진중공업 사측이 국회 권고안 합의 이후에도 계속 버티던 상황에서도 희망버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결국 11월 26일 6차 희망버스를 앞둔 상황에서 조남호는 무릎을 꿇었다.

따라서 “야당의 적극적 지원”이나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야권]연대 전략”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민중의 소리〉의 평가는 설득력이 없다. 조남호 청문회를 만들고 지지 여론을 확대한 것도, 민주당 등까지 희망버스에 동조하게 만든 것도, 바로 대중 스스로의 행동, 연대 투쟁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런 힘을 결집시키고 열정과 자발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 희망버

스 조직자들의 민주적 리더십도 큰 몫을 했다. 진보정당·민주노총 지도자들이 투쟁과 연대 건설보다는 선거·국회에서 민주당과의 공조에 치중하면서 생긴 공백을 희망버스가 메워 줬던 것이다.

희망버스는 경제 위기 시기에도 얼마든지 강력한 연대를 조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진정한 ‘희망’을 보여 줬다. 이번 승리는 지난 몇 년간 조직 노동자들을 괴롭힌 쌍용차 트라우마, 즉 ‘전국적 연대는 불가능하고 강력한 투쟁은 고립되기 십상’이라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었다. 물론, 앞으로 조남호가 뒤통수를 치며 약속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한진중공업 노조의 투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지금 재벌·기업주들의 일방적인 고통전가에 대한 사회적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최근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안 등을 내놨지만, 이들은 동시에 이런 양보 제스처가 부를 수 있는 투쟁의 분출을 막고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모순된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과 이명박의 레임덕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4만 명이 쏟아져 나왔다. 작업장 밖에서 가해진 정치적 자극이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이다.

지금 희망버스 기획단은 “이제 한 정거장을 지났을 뿐”이라며 “1퍼센트에 맞서 모든 이들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계속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에서 협상이 타결된 날,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아내가 또 비극적 죽음을 맞았다. 벌써 19번째 죽음이다. 이 죽음 앞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은 “희망버스의 연대 행동이 쌍용차로 향해 죽음의 행렬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희망버스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 노동자들은 위축돼 있던 근육을 풀고 연대와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이윤 체제의 작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하며 ‘1퍼센트’를 위한 고통전가에 맞서는 투쟁에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새롭게 급진화하며 희망버스와 한미FTA 저지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학생 들은 앞으로도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활동가들은 이런 청년들의 활기와 자신감을 노동자 투쟁으로 실어 나르며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조명지

이제 쌍용차로 핸들을 돌리자

“해고는 살인이다!”

2009년, 경제 위기의 첫 희생양이 된 쌍용차 노동자들이 77일간의 점거파업으로 전국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비정한 정부와 한국 자본주의는 이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외친 ‘정리해고 철회’ 요구를 경찰의 살인 진압으로 무참히 짓밟았다.

그래서 무려 3천여 명이 작업장에서 쫓겨났고, 1년 뒤 복직을 약속받은 무급 휴직자 4백70여 명이 아직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쌍용차는 노동자들의 “무덤”이 되고 “분향소”가 되고 있다.

벌써 열아홉 명의 노동자·가족들이 생활고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네 명이

사망했다.

11월 10일에 한 해고자의 아내가 차가운 시체로 발견됐다. 초등학교 6학년 딸과 여섯 살짜리 아들이 엄마의 주검을 안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빠를 기다리며 이를 밤을 지새웠다!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내동댕이친 정부와 기업주들의 탐욕이 이런 참극을 만들었다.

바로 이를 전에는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량해고 이후 공장 안의 노동자들도 혹독한 노동강도와 감시 속에서 ‘자칫하면 또 잡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문제는 이런 비극적 죽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앞으로 또 누가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고 호느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천리길을 걸어 희망버스 참가를 호소하고 앞장서 연대를 실천해 오기도 했다.

이 노동자들이 지금, “희망버스의 핸들을 쌍용차로 돌려달라는 절절한 요청”(〈한겨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자 쌍용차 사측은 벌써부터 “쌍용차와 한진중공업은 다르다”며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꿈꾸며 달려온 희망버스가 쌍용차를 다음 정거장으로 삼아야 한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급속노조도 희망버스가 열어 주는



신민회(한겨레)

기회를 이용해 단결과 투쟁을 확대하며 한진중공업에서의 승리를 쌍용차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이어야 한다.

박설

공황 상태로 빠져 드는 이명박과 우파

재보선 참패, 안철수 열풍, 한미FTA 반대 투쟁의 급부상 등 성난 민심의 쓰나미가 한나라당을 덮치면서 이명박 정부는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도 살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됐다.

특히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고 이명박은 물론 박근혜도 나서서 돌격 명령을 내렸지만 별 반응도 없는 게 지금 한나라당의 상황이다.

농민들이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위협하자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비준안에 반대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다.

이러는 동안 이명박 지지율은 20퍼센트대로 추락했고, 안철수의 '청춘콘서트'를 흥내내 추진한 드림콘서트도 연예인들이 모두 출연을 거절해 망신만 당했다.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불안한 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처지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은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누구도 서로를 못 믿는 공황 상태에 빠져 무기력해지고 있다.

'고령 의원 물갈이론'이 나오자, 친이계는 이상득 제거 음모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친박계는 박근혜 죽이기라며 반발한다.

이런 아노미 상황은 조전혁 같은 골통 우파적 인물이 '쇄신파'라고 설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처럼 난파선에서 뛰어나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분당설도 본격화되고 있다.

방금 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도하며 우익의 선봉에 섰던 박세일은 민주당 손학규도 함께할 수 있는 중도 신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친박계는 '박세일 신당'이 청와대가 개입한 박근혜 죽이기 음모라고 의심하며, 친박신당 얘기도 흘린다. 이미 한나라당의 실세인 박근혜와 친박이 굳이 한나라당에서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친박신당' 설은 사실상 이명박에게 '나가 달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친이계에서는 안철수를 영입해 친이신당을 만들자는 망상도 흘러나온다.

집권여당을 뒤흔든 위기감은 외부, 즉 기층 대중의 계급적 분노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기층의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될수록 분열은 깊어질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의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얻기는커녕 동반 추락하고 있다. 반한나라당 전선에서 끊임없이 동요한 탓에 11월 들어 민주당은 도리어 지지



한번 뒤흔쳐 맞았다가 겨우 다시 손학규의 손을 잡은 이명박 '나를 믿어달라'며 또 사기치고 있다.

율이 떨어졌다.

민주당은 한미FTA 체결 원조 담당계 입장을 몇 번씩 반복하며 비난 받았다. 민주당은 15일 이명박의 국회 방문과 면담에 응하면서 다시 타협적 태도를 보였다.

김진표 등은 '한나라당 2중대', '트로이의 목마'라고 욕먹고 있고, 한미FTA 때문에 민주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래서 NGO인사들과 문성근, 문재인

등 친노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 바깥에서 야권대통합연석회의를 소집하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겨냥한 창당 논의는 이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 결국 민주당

박원순 개혁의 지속·확대를 위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무적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 승인,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 반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2천8백 명 정규직화 발표에 이어서 복지예산도 오세훈 때보다 44퍼센트 더 늘려 잡았다.

서울시청광장 개방 약속도 지켰다. 서울시는 스케이트장 공사를 빌미로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서울시청 집회 허가를 두 차례나 거부했지만, 박원순 시장의 지시로 공사를 미루 노동자대회를 시청광장에서 치를 수 있었다.

사망한 노숙인의 시신을 찾아 "외롭게 숨질 때까지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는가 성찰"하며 국화를 헌화하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모든 일은 '나경원이 됐으면 어쩔 뻔 했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박원순 후보의 행보는 그에게 투표한

노동계급 청년세대의 사기를 북돋고 있다. 한미FTA에 대해 박 시장이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도 운동에 도움이 됐다.

우파와 조중동은 이런 박 시장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참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무절제와 포퓰리즘" 운운하며 박 시장의 행보를 흠집 내려고 안달이다. 최근 한 우익 여성의 박 시장 구타 사건도 이런 악선동이 낳은 결과다. 교과부 장관 이주호 측근을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임명해 무상급식 예산을 꺾으려고도 한다.

독립적 태도

그러나 분당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집권당의 위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파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한미FTA 반대 운동 같은 아래로부터 운동도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박원순 시장이 우파와 기득권 고위 관료들의 저항을 뚫

고 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 보자면, 박원순 시장이 최근 민주당과 일부 친노세력, '혁신과 통합' 등이 결집한 '민주진보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 준비모임에 동참한 것이 일관된 개혁 추진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사실, 박 시장의 당선 자체가 민주당이 아닌 제3세력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물론 '준비모임'에는 진보적 NGO 지도자들도 동참하고 있고, 민주당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잡음 때문에 그 미래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박 시장이 일관된 진보 개혁을 해 나가려면 민주당과 친노세력에 대한 독립적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한편, 박 시장이 취임 후 첫 인사조치에서 친민주당 관료와 일부 오세훈 때 관료를 전진 배치한 것도 아쉽다. 진보적 인물들을 기용해 진보적 정책들을 분명히 밀고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 텐데 말이다.

또, 박 시장이 복지 확대와 함께 '임기

이 대주주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이 '손학규+문재인'에 그친다면 이 통합당은 '도로 민주당'으로 비춰질 게 뻔하다.

그래서 손학규, 문재인 등은 이 통합정당을 "민주진보통합정당"으로 부르며 안철수와 박원순, 진보정당, 한국노총 등이 좌우로 폭넓게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분간 야권통합정당론이 최근 표출된 대중적인 반한나라·비민주당 정서의 모순되고 불완전한 구심점 구실을 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모순 때문에 진보정당이 독립적으로 기층의 불만을 행동으로 대변한다면 파고들 여지가 결코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한미FTA 저지 투쟁 국면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은 커졌고,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반대로 진보진영이 민주당·친노세력과 구분되는 독자적 가치와 정책을 약화시키면 대중투쟁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한나라·비민주당 정서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수진영에 기력을 회복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한미FTA 저지 투쟁 등 대중투쟁을 강화하면서 정치적 도약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

김문성

내 서울시 부제 7조 감축'과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것도 장차 모순을 낳을 수 있다. '재정건전성'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복지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부자와 기업 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노동자·서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버핏세'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분명히 하며 정부를 압박할 운동을 호소할 필요도 있다.

그 점에서 최근 동국대 특강에서 박 시장이 학생들에게 "왜 등록금 철폐를 위한 투쟁은 하지 않냐"고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진보진영은 우파에 맞서 박원순 시장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 기조를 굽힘 없이 유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아래로부터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최미진

안철수의 기부와 사회불평등

안철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안철수 교수는 1퍼센트만을 위한 이명박·박근혜에 반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멘토로 다가가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의 행보는 이미 주요 변수로 자리잡았다.

최근 안철수 교수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1천5백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 것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기성 정치인들의 탐욕과 부패에 신물난 많은 이들이 "자원의 편중된 배분"을 문제삼으며 행해진 안 교수의 사회환원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나.

그동안 한국의 자본가들과 이명박 등이 등떠밀려 했던 '기부'와 차이점도 부각된다.

이명박은·이건희·정몽구 등은 자기

들이 저지른 추악한 부패를 덮으려고 '기부' 선언을 했다. 이 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아직도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못 정했고 기껏해야 어느 재단 금고에 들어갈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회환원'이 아니라 편법 증여용 위탁관리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반대로, 안 교수의 기부는, 그가 예전에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보유 주식을 배분한 것과 맞물려 재벌들의 기부와는 '격'이 다르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아가 안 교수는 자신의 기부가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SNS에서는 안 교수를 지지하는 기부 선언이 이어졌고 이것을 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

망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기부 운동으로 1퍼센트만을 위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그 한계가 명백하다.

첫째, 기부로 모은 돈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는 수 천억 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려면 매년 4조~5조 원이 필요하다.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명박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때 수십조 원어치 무기 계약도 체결했다. 지난 4년간 이명박이 부자 감세하고 4대강 삼질하는 데 쓴 돈만 수십조

원이다.

그래서 <한겨레>도 "기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온정주의로 돌린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한다. 필요한 것은 부자에게 기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로 그들의 납세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기 해방

둘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자들조차 기부나 자선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착할 수 있다. 이명박, 이건희, 정몽구 같은 자들이 모두 이 부류에 속한다. 이들은 생색내기 '기부'를 하면서 불평등을 극대화할 한미FTA를 추진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할 국립대 법인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안철

수 교수는 '이념이 아니라 상식'을 운운하며 이런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의 본질에 고유한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있다. 기부나 자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수혜자들을 무기력한 수동적 피해자로 묘사할 뿐 저항이나 자기해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빈곤과 불평등 같은 근본적 문제들이 노동 대중 자신의 집단적 투쟁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안철수 교수의 기부가 평범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기업주 부자들에게 증세를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장호중

민주노동당·참여당·통합연대 ‘원샷 통합’이라는 끼워팔기에 반대한다

모든 단결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김인식민주노동당 서울 중구 위원장. 다함께 운영위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국민참여당(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통합연대)와 ‘3자 원샷 통합’을 추진중이다. 이를 두고 ‘진보 3자 통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여당은 진보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 진보대통합의 취지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진보 정치 세력이 단결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곧, 진보 통합은 노동계급(그리고 피억압 민중) 내의 단결과 연대를 뜻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의 전횡에 맞서 광범한 단결을 원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맞서 야권 단일 후보인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것이 한 사례다.

또, 한미FTA 저지 운동에 민주당도 그 일부로 참여한다. 유시민 참여당 대표도 최근에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한미FTA를 추진했던 당사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진보진영이 2006년부터 벌여 온 한미FTA 반대 운동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력은 늘 운동의 막차를 타고 왔다 첫차를 타고 떠나는데다, 동요를 거듭하므로 진보진영은 이 세력에게 정치적으로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요컨대,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들은 불가피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전술적 제휴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들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

첫차와 막차

그런데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친자본주의적 정당인 참여당과 합당하려 한다. 참여당은 자본가 계급 자체는 아니더라도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변호인이다. 참여당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에서 인력과 돈을 총원하지 않는다. 참여당 지도부나 선거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전직 청와대 고위 관료, 전직 공공기관 임원, 기업주 출신으로 민주당 등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참여당이 강령에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으며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것도 이런 계급적 기반 때문이다.

그런데 각자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 세력들의 동맹은 노동자 계급의 힘을 마비시킬 수 있다.

실제로 참여당은 지난 9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했던 통합진보정당 강령 초안을 두고 이렇게 평했다. “대중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이념적 접근(사회주의 이상, 세계변혁운동의 성과 계승, 자본주의 폐해 극복 등)에 대해 거듭 우려하고 우리 당의 참여를 위해서는 … 시정돼야 한다”, “노동자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함”

러시아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적대 계급 간의 체계적 동맹을 뜻하는 인민전선의 문제점을 이렇게 비판했다.

“인민전선의 이론가들은 본질적으로 산수의 첫 번째 규칙, 즉 덧셈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자유주의자를 전부 더하면, 각각의 개별적인 숫자보다 더 크다. 이것이 이들이 알고 있는 전부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산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역학 하나는 더 필요하다. 힘의 평행사변형의 법칙은 정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평행사변형에서 합력(合力)은 분력(分力)이 서로 다를수록 더 작아진다. 정치적 동맹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통합연대·참여당 대표. 친자본주의적 참여당과의 통합은 ‘진보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

있다면, 합력은 0과 같아질지도 모른다.” 게다가 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민주노동당과 통합 후 야권단일정당에 합류하겠다고 한다. “민주노동당도 포함되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진보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야권대통합에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포함해 많은 진보 계열 대중은 마땅치 않아도 진보정당이 성장하려면 참여당과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시민은 그 반대로 야권단일정당으로 가는 통로쯤으로 생각한다. 그런데도 유시민의 구상을 모를 리 없는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아무 비판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3자 통합’ 추진은 당대회 결정 정면 부정

지난 8~9월에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추진한 참여당과의 통합은 그 당 안팎에서 광범한 반대에 부딪혔다. 현장 노동자들과 노조 지도자들 수천 명이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8월과 9월에 연이어 당대회를 소집해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려 했으나, 두 번 다 실패했다.

특히,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는 분명하게 참여당과의 통합 안건을 부결시켰다. 장원섭 민주노동당 사무총장도 “당대회 결정은 정확히 [참여당과의 통합이] 부결이 된 것이다. 이것은 조직적 결정이다”(10월 25일 민주노동당 대전 시당 간담회에서) 하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3자 통합’을 몰래 추진한 것은 당대회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 끝에 참여당과의 통합

이 부결됐는데, 소수 지도자들이 당 위에 군림하며 대의원 대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노동자 운동의 민주주의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다.

게다가 이번 3자 비밀 회동은 지도부 자신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당대회 직후인 9월 28일에 “당대회 부결의 의미를 깊이 새겨 대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장원섭 민주노동당 사무총장도 “지도부는 새로운 당론을 만들기 전에 당대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10월 27일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당원들과의 간담회) 하고 말했다.

그래 놓고는 참여당 등과 비밀리에 전격 회동해 ‘3자 통합’을 합의한 것이다.

‘3자 통합’은 10·26 재보선의 정치적 의미와도 어긋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3자 통합’ 추진은 10·26 재보선 결과가 뜻하는 바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10·26 재보선 결과는 대중의 반한나라당 정서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주당도 사실상 패배했다. 참여당의 정치적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이것은 대중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계승 세력을 미덥게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정서 덕분에 박원순 후보가 서울 시장에 당선됐다. 한때 잠시나마 민주당을 통해 반MB 정서를 표현했던(그때조차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 대중이 이제는 그 당보다 좀 더 왼쪽에 있는 시민운동 쪽으로 정치적 기대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9·25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캠페인을 벌인 당원들. 다시금 강력한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특징은 민주노동당의 만만찮은 득표력이다. 민주노동당은 전국 평균 25퍼센트가량 득표했다.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대중의 변화 염원 정서와 접촉하려면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저지 운동, 99퍼센트 운동 등에서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엉뚱하게도 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결코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대응책이 아니다.

불신 받는 ‘노·심·조’의 기회주의적 처신

통합연대가 참여당과의 통합을 찬성했다는 것도 ‘3자 통합’을 정당화해 주지 못한다.

통합연대의 핵심 인사들(노회찬, 심상정, 조승수)은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한때 이들은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를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다 별안간 참여당과의 통합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들은 이전에 ‘민주노동당이 참여당과 통합하면서 우경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9월 8일 통합연대 결성을 제안하면서 “참여당의 갑작스런 새로운 진보정당 참여 논란은 진보정치 세력과 민중운동 세력의 분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도 했다.

물론 이들의 ‘3자 원샷 통합’ 찬성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당권과 지도자들의 집요한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안 부결, ‘참여당은 선 통합 대상 아니다’라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등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다”는 이들의 변명은 구차하다.

사실, 심상정 통합연대 공동대표는 참여당과의 통합론 원조 격이니 그로서는 급격한 입장 선회는 아니다. 그러나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침묵을 지키거나 때로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다 이제와서 ‘3자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매우 부정직한 사람임을 보여 준다.

노회찬 통합연대 공동대표는 심지어(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민주당과도 통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까지 나아갔다. 10여 년에 걸쳐 건설한 진보적 노동자 정당을 자본가

정당에 헌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말 바꾸기 수준이 아니라 ‘변절’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참여당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던 조승수 통합연대 공동대표는 노회찬과 심상정의 뒤를 침묵으로 쫓아가고 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에 이들의 지지자들조차 통합연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다시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운동에 나서자

그러나 소수 지도자들의 의지가 언제나 가뿐하게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의 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는 이미 두 차례나 좌절된 바 있다.

소수 지도자들의 의지만 보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일 게다. <한겨레> 석진환 기자가 ‘3자 원샷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써내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석 기자의 왜곡 보도는 처음도 아니다. 그는 6월 민주노동당 당대회가 끝난 뒤에는 “참여당과의 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9월 민주노동당 당대회 결과를 두고는 참여당과의 통합 안건을 부결시킨 쪽이 진보대통합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보도했다).

따라서 자본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당의 존재와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은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을 반대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결코 민주노동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연대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체 노동자 운동과 진보진영의 문제다. 주요 진보정당이 참여당과 통합하는 식으로 우경화한다면, 그것은 노동자 투쟁의 고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현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호소해야 한다. 다행히 민주노총의 중집은 여전히 ‘참여당은 선 진보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11월 8일 중집에서 이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9월 25일 당대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 결정을 번복하려고 당대회를 재소집하는 것은 노동자 운동의 민주주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미국 오를랜드 파업을 지지하는 시위대.

세계적 지각변동을 낳는 반긴축 투쟁과 ‘점거하라’ 운동

다음은 최근 있었던 국제사회주의경향(ST) 주요 단체 대변자들 사이의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과 관련한 최일봉(다함께 국제연락간사)의 말은 이 신문의 다른 기사들에 거의 반영된 내용이라 대부분 생략했다. 녹취와 번역에는 전문통역자이자 다함께 회원인 박준규와 천경록이 수고해 줬다.

긴축 반대 투쟁

파노스 가르가나스(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 유로존 지배자들은 그리스 부채 위기 안정화에도 실패했고 위기 확산을 막는 데도 실패했다. 이러한 무능력이 정치 위기를 낳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에서 특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그리스 여당은 보수 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려 하는데 이는 그리스 민중이 엄청난 규모로 저항을 벌여 온 결과다. 근래의 총파업 시위 규모는 지난 2년 중 최대일 뿐 아니라 그리스 역사상 최대였다. 현장 조합원들의 주도성이 두드러졌다.

새 정부를 구성하려는 의도는 노동자들을 단속할 더 강력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임이 명백하다. 사회당 정부는 민중의 저항 앞에 무기력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리스 노동계급에 대한 경제적 공격뿐 아니라 정치적 공격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독일 등의 지배자들은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명분으로 그리스가 모국의 '예외'라고 말한다. 부채 규모가 크고 국민들이 통제 불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 문제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유럽 일반의 문제고, 우리가 제기하는 해결책이 다른 유럽 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주장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그리스는 반긴축 투쟁의 최전선일 뿐 아니라 경제 위기에 직면한 지배계급의 철저한 무능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재원 조달 방법에 이견이 있고 오바마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중국도 나름 골치 아

픈 경제 문제를 안고 있는 탓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제책은 어차피 실패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 사태는 세계 지배계급의 완벽한 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영국에서는 다가를 공공부문 파업이 주된 쟁점이다. 지난 6월 말 공공부문 파업은 SWP의 영향력이 큰 좌파 노조들이 주도했다. 그런데 이번 11월 30일에 예정된 공공부문 파업에는 주요 노조들도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UNISON이 동참하기로 한 것은 전환점이었다. 이번 주 초에는 또 한 번 교비가 있었다. 정부가 연금 관련해서 새로운 양보안을 제안했고, 영국노총 총서기가 이를 환영했다. 그들은 이를 빌미로 파업을 취소하려 했으나 처참히 실패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78퍼센트였다.

어쨌든 11월 30일 파업은 참여율이 99퍼센트는 될 것이고, UNISON의 동참으로 6월 파업보다 질적으로 더 커질 것이다. 우리는 좌파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공동전선인데, 우리는 앞으로 투쟁하고자 하는 노조 간부들과 SWP 사이의 더 장기적인 공동전선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좌파 노조 간부들에 과비판적으로 의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좌파적인 노조에 속하는 소방수노조(FBU)가 정부의 연금 양보안을 받아들여 파업에서 빠지기로 한 것이 시사적이다. 그러나 절실 경우 Unite the Resistance는 더 큰 투쟁을 조직하는 수단이자 진정한 현장 조합원 운동을 건설하는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모든 상황 전개는 영국에서 1980년

대 파보 파업의 패배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전환점이다.

한편, 그리스 위기에 대한 좌파적 대안인 시아 내 우파는 광범한 전선을 위해 기존 강령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주장했다. 우리는 반자본주의 강령의 핵심인 '노동자 통제' 요구를 고수하며 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건설하고자 주장했다. 긴축 관련 논쟁 지형도 바뀌었으나 반자본주의적 요구에 대한 여론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결정문에서 우파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파노스: 그리스 공산당은 종파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작은 한 걸음을 뒀다. 지난 총파업 때 공산당도 의회 앞 시위에 합류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문제가 있었지만, 공산당의 변화는 강령 수준에서도 감지된다. 최근까지 부채 탕감 요구를 기회주의라고 비난하던 공산당이 이제는 부채 탕감을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주요 좌파 정당인 시나스피소스도 애당초 협상을 통한 부채 재조정(부채 탕감이 아닌 만기 연장을 위해 유법연합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시나스피소스도 부채의 큰 부분을 탕감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유로존 탈퇴 여부를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여전히다. 시나스피소스는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일절 배제한다. 공산당은 유로존 탈퇴와 전류 시아에서 갈팡질팡한다. 어쨌든 공산당과 시나스피소스 모두 국민투표에서는 반대표를 던지자는 입장이었다. 시나스피소스는 구제책에 대한 반대표일 뿐이라는 단서를 달아는 했지만 말이다. 이처럼 좌파 공동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파판드레우가 국민투표를 철회한 한 가지 이유이기도 했다.

극좌파 쪽의 안타르시아는 최근 첫 전국 대회를 열었는데 대성공이었다. 회원 수가

3천 명을 돌파했고, 이들이 선출한 대의원 9백여 명이 대회에 참석했다. 주된 안건은 좌파 전선 결성에 관한 것이었다. 안타르시아 내 우파는 광범한 전선을 위해 기존 강령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주장했다. 우리는 반자본주의 강령의 핵심인 '노동자 통제' 요구를 고수하며 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건설하고자 주장했다. 긴축 관련 논쟁 지형도 바뀌었으나 반자본주의적 요구에 대한 여론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결정문에서 우파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파파가 강력해지고 있어 다음 선거에서는 모든 좌파들의 대표율이 올라갈 것 같다. 안타르시아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그리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테반 보르노스트(독일 마르크스21): 독일에서는 '점거하라' 운동이 판을 완전히 바꿔 놓고 있다. 그동안 독일에서 경제 위기 관련 논의는 지배계급의 두 보좌가 주도했다. 한쪽은 취약한 국가들을 유로존에서 쫓아내자고 했다. 독일이 그 나라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다른 한쪽은 취약한 국가들을 유로존에 남겨 두되, 그 나라들에 프랑스·독일·유럽연합의 독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상황이 변했다. 구제의 비용을 누가 치러야 하나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자극받아 노조가 쟁들거리기 시작했다. 노조 지도자

최일봉(다함께): 국민투표에 대한 그리스 대중과 좌파의 반응은 어땠는가?

알렉스: 그리스의 전반적 상황과 안타르시아의 압력이 결합한 결과 그리스 양대 급진 합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시나스피소스가 원측으로 끌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타르시아 그리스 반자본주의 연합,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그리스 지매조직인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도 참여하고 있다.

Unite the Resistance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영국 정부에 맞서, 긴축 반대 활동가들과 청년·학생, 노조 활동가들이 함께 노동조합 파업을 지원하고자 결성한 공동전선



10월 28일 군사행진이 벌어지는 도로를 점거한 그리스 반정부 시위대.

들은 2008년 위기 이래 독일 정부의 대응을 지지해 왔다. 독일 노총은 유로존 구제금융 패키지에 대한 각 정당의 찬성표를 촉구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불만은 품고 있던 노조 활동가들에게 '점거하라' 시위가 초점을 제공했다. 독일에서 오랜만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노동조합 쟁점 등을 결합하려 한다.

알렉스: '점거하라' 시위의 시작은 튀니지 혁명이었다. 튀니지에서 이집트로 혁명이 번졌고, 5월 15일 스페인에서 타흐리르 광장 점거를 모방한 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그리스 신타그마 광장 점거 시위로, 급기야 월가 점거 시위로 전이된 것이다.

미국의 점거 운동은 오바마가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좌절뿐 아니라 티파티의 미치광이 우익들이 그동안 경제 위기 대응에 관한 논의를 주도한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점거 시위의 정치적 파장이 어찌나 컸는지, 심지어 CNN도 열린 점거 시위를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오를랜드에서는 해병대 출신 시위자가 다친 뒤로 오를랜드 시장이 시청 직원들에게 시위에 동참하라고 하루 휴가를 줬을 정도다.

월가에서는 점거 시위가 쿠르티 공원을 벗어나 워싱턴 스퀘어 공원 등지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이 운동 참가자들의 정치 의식은 가변적이다. 내가 얼마 전 직접 가 본 필라델피아 점거 시위 참가자들은 주로 젊은 학생들이었고 온갖 혼란스러운 자율주의와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민주당이 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노조를 통해 간접 관여하기도 한다. 오바마도 이 운동을 본인의 재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한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이 운동이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영국의 점거 운동은 미국에 견주면 훨씬 소규모다. 그러나 런던의 세인트폴 교회 앞 점거 시위는 국교회를 좌파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 위 성직자 두 명이 사임했고 캔터베리 대주교는 토빈세를 지지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준 자율주의적 경향의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딱히 적대적이지는 않다. 사실 우리 정치와 자율주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점거 시위에 참가할 때는 깃발이고 간행물이고 다 내던져 버리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되지만, 점거 시위대가 정당 참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위대를 총파적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 시위대가 정당에 거부감을 느끼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 눈에는 다형케도 일개 정당일 뿐이고, 그들의 신뢰를 획득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우리는 시위대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기 시작한다.

점거 시위에 참가할 때는 깃발이고 간행물이고 다 내던져 버리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되지만, 점거 시위대가 정당 참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위대를 총파적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 시위대가 정당에 거부감을 느끼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 눈에는 다형케도 일개 정당일 뿐이고, 그들의 신뢰를 획득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우리는 시위대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기 시작한다.

조니 존스(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영국 노동당 당수 에드 밀리반드조차 점거 시위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 점거 시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지와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영국에서 우리는 세인트폴 성당 앞 시위 캠프를 유지하고 자 여려 실무를 도맡아 하기도 했지만, 노조원들의 지지 방면을 조직해 시위 참가자들에게서 큰 신뢰를 얻기도 했다.

최근에 점거 캠프에서 전투적인 행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나눠 준 팻말을 들고 우리가 선창하는 구호를 따라 외치는 등 SWP가 행진을 사실상 주도했다. 의회 앞에서 경찰에 가로막혔는데, 우리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나가자 대다수 대열이 우리를 따라왔다. 격정과

달리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 이처럼 우리가 실천 속에서 연대를 건설하는 등의 기여를 하는 것은 중요하고 운동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11월 10일에는 전국 전기 기사들의 시위와 전국적 학생 시위가 함께 열리고, 이들의 행진이 세인트폴 성당 앞의 점거 캠프를 경유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운동들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고무하는 현상은 정말 감동적이다. 이 점은 미국의 극좌파들이 '노동조합 연대 위원회'를 통해 조직 노동자들과 점거 운동 간의 연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노동계급 중심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점거 운동에 함께하고 노동계급과의 연대를 직접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처드 와이먼(캐나다 국제사회주의자들 IS): 캐나다에서도 점거 시위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지를 휩쓸고 있다. 10월 15일에는 캐나다 전역에서 시위 1백 건이 열렸다.

점거 시위는 몇몇 작업장의 파업 장기화로 사회가 저하된 캐나다 노동계급에게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었다. 좌파들 중 일부는 시위대의 요구가 불분명하거나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거리를 뒀지만 우리는 적극 참여했다. 우리가 가져간 배너가 사람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너도나도 우리 배너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우리가 낸] 시위에 매진해서 비상 인식을 해야 했다.

물론 시위 참가자 중에는 기묘한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 경험상 불순 세력들이 운동을 포섭하려는 것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노조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파업 중인 캐나다 항공 승무원들, 1년 넘게 직장폐쇄에 맞서 싸워 온 철강 노동자들, 우편 노동자들을 시위 대열에 합류시켰다. 또, 운동의 전진을 위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전 북적으로 우파인 합전원 참전용사 단체도 '우리도 99퍼센트다'라면서 시위에 합류했다.

파노스: 그리스에서는 올여름 이전에 이미 광장 점거 운동이 있었다. 광장 운동과 노동자 파업 간의 연대를 조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정당 깃발이나 간행물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안타르시아 등의 조직된 극좌파 대열이 경찰과 전투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거부감이 사라지는 경세 나타났다.

여름 이후 파업은 지속되고 있지만 광장 점거 운동은 수그러들었다. 그전에 우리는 광장 점거 운동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의 구심점으로 삼자는 제안을 했다. 많은 지지를 받은 제안이었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다. 지금도 우리는 광장 점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병렬 폐쇄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지방 정부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알렉스: 어쨌든 '점거하라' 운동은 일반적으로 말해 좌경과 현상이고 대단히 긍정적인 현상이다. 특히 지금까지 우익이 정치 논쟁을 주도해온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철저히 파산한 유로존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유로존 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파산'이다. 그러나 파산한 것은 경제만이 아니다. 지적·도덕적·정치적 파산도 동시에 발생했다. 최근 사례를 들겠다.

첫째 파산은 지적 파산이다. <라디오 4>의 '투데이' 프로그램이 인터뷰한 경제학자들은 죄다 그리스가 디플트라고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유로존 공식 정책과 대립되는 대답을 할 때마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충격을 받아 입을 쩍 벌였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사무엘 브리튼의 최근 칼럼 제목은 "왜냐는 그리스 긴축 국민투표에서 '반대'를 찍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였다.

브리튼은 1970년대 통화주의의 탄생에 기여한 인물이므로 이번 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 칼럼에서 올바른 지적을 했다.

"그리스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 중 하나는 그리스가 한층 더 가혹한 재정 긴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2008년에 전취 그리스 국내총생산 규모가 9퍼센트, 산업생산이 거의 23퍼센트나 하락한 상황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스 실업률이 17퍼센트나 되는 것도 무시했다.

"국제 기구와 채권장 등은 그리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말만 반복해서 했다."

둘째 파산은 도덕적 파산이다. 그리스 총리 파판드레우가 새로운 추가 긴축안을 국민투표에 부지기로 결정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결정이 불려온 후폭풍에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유럽연합 엘리트들 — 특히 앙겔라 메르켈과 니콜라 사르코지 — 의 무지막이란 분노는 많은 것을 보여 줬다.

이들은 그리스 민중이 임금·연금과 일자리 축소, 공공서비스 악화와 중세에 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분노했다.

이렇게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로부터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로존 계획이 추진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메르켈과 사르코지는 유로존 내 재정 통합을 강화하려 한다.

이것은 유로존의 민주주의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선출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관료들 — 독일이 밀어붙이는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심지어 유럽법원 — 이 회원국들의 조세와 지출을 감독할 것이다.

유럽법원

셋째 파산은 정치적 파산이다. 2주 전 G20 정상들이 프랑스 칸에서 회동했다. G20의 설립 목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업국'을 포함한 국제 기구들 통해 전 세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2008, 2009년에 열린 G20 정상회담이 세계경제를 구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이번에 G20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전혀 없다. 물론, 모든 이가 그 책임을 그리스의 정치적 격변으로 돌린다. 그러나 변명일 뿐이다.

메르켈과 사르코지는 그리스 같은 작은 나라에 분풀이를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3주 전 열린 또 한 차례의 유로존 '위기 해결' 정상회담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구제' 안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많은 부채를 가진 유로존 은행과 정부 들을 구제하는 데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큰 문제다.

그래서 EFSF의장이 베이징으로 날아가 손을 벌리는 망신을 당해야 했다. 옛날 같았으면 미국이 나서 강제로 협의를 만들고 자금 마련을 도왔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정체 중이고 델레버진 티파티 인사들이 하원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재정적 자원이 없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논평했다. "미국의 지도력이 약해진 세계의 모습에 공공한 사람은 유로존 위기를 보면 된다. 유로존 위기는 서방 진영의 약점을 만천하에 보여 줬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유로존 구제를 도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했다."

유로존 지도자들은 이미 유럽의 구제 정책을 감독하고 있는 IMF한테도 유로존을 구할 돈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의 도움을 받아 IMF 분담금 증액 방안을 무산시켰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정부가 분담금을 늘려선 안 된다는 국내의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로존이 알아서 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레온 트로츠키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인류의 위기는 혁명적 지도력의 위기로 표현되고 있다."

오늘날 그것은 전적으로 자본주의 지도력의 부족으로 표현되고 있다.

번역 김용욱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의 퇴진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

로마에서 루이스 바이만

11월 12일 모두가 증오하던 총리 베를루스코니가 20년 만에 마침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로마 도심으로 몰려들었고, 승리를 만끽하며 밤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베를루스코니 저택에 다다르자 오래된 민중가요인 ‘벨라 차오’를 불렀다. 베를루스코니 저택 앞에 모인 사람들은 베를루스코니를 향해 외쳤다. “뛰어 내려! 뛰어 내려! 뛰어 내려!”

베를루스코니의 퇴진은 역사상 가장 요상한 정치인의 종말을 보여 준다. 베를루스코니는 편협하고 밑살맞은 인종차별주의자였다. 그는 독일인 유럽의회 의원을 “나치”라고 불렀고 오바마에게는 “선전을 잘 하셨군요”라고 말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젊은, 아마도 미성년인 여성과의 성매매에 집착했다. 그는 변론한답시고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저는 게이가 아니죠.” 이탈리아 LGBT 운동은 이렇게 응수했다. “적어도 우리는 베를루스코니가 아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를 마치 과거 자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 준 부실 공사 현장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수많은 이탈리아인을 고통에 빠뜨렸다.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에서는 단계적 약 때문에 환자도 출근해야 했고 교사들은 일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휴가 기간 동안 출산했다. 또, 임금은 정제했지만 물가는 치솟았다.

아무 권리도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적 공격이 주기적으로 일어났고 마피아의 그림자가 사방에 드리워져 있었다.

많은 사람은 2011년을 독재자들이 몰락한 해로 기억할 것이다. 튀니지의 벤 알리, 이집트의 무바라크, 이제는 베를루스코니가 몰락했다.

독재자

베를루스코니는 확실히 독재자였다. 총리 시절에 그는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 이후 누구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자기 손에 집중시켰다.

그는 또한 부패했다. 그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쓴 이유 중 하나는 수많은 죄목 중 하나로 기소돼 감옥에서 썩는 것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베를루스코니는 언제나 자신이 억누른 사람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1994년에 입각한 베를루스코니의 첫 정부는 노동자 총

파업의 압력으로 연정이 분열하면서 실각했다.

2001년 그가 재선하자 대중 운동과 전투적 활동들이 폭발했다. 그중에는 2001년 제노바의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가 있었다.

정상회담 사흘 동안 제노바는 전쟁터 같았다. 경찰들은 25만 명 규모의 시위대를 미친 듯이 공격했다. 시위대 중 한 명인 카를로 줄리아니가 살해됐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그러자 수백만 명이 참가한 파업과 시위가 연달아 벌어졌다. 반자본주의 운동은 자연스럽게 반전 운동으로 옮겨갔다.

2002년 피렌체에서 1백만 명 규모의 반전 시위가 벌어지자 베를루스코니는 이라크 침공 과정에 동참할 이탈리아 전투 부대를 단 한 명도 보내지 못했다.

결국 베를루스코니는 2006년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좌파의 오류 탓에 베를루스코니는 2년 뒤에 복귀할 수 있었다.

급진좌파 일부도 포함된 좌파 연립정부는 그 2년 동안 베를루스코니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했고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했다.

심지어 2008년 베를루스코니가 재선하자 좌파는 ‘국가적 단결’을 위해 베를루스코니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탄탄했던 좌파 지역 조직과 대표자들의 네트워크는 약화했다.

사실 베를루스코니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선 것은 의회 밖의 세력이었다. 피아트 자동차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파업을 일으켰다. 학생운동은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해 투쟁했다.

올해 6월에 치러진 사유화에 관한 세 차례 국민투표에서 전국의 반사유화 운동과 사회운동이 베를루스코니를 패배시켰다.

그때부터 이탈리아에서는 저항의 행진이 이어졌다. 몇 차례 총파업이 벌어졌고 산지 오바니 성당을 점거한 10월 15일 대중시위가 있었다. 덕분에 베를루스코니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됐고 마침내 몰락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축하하는 동안에도 우리 앞에 과제가 쌓이고 있다.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탈리아의 급진 운동은 급속히 성장하는 국제적 투쟁 속에서 자기 힘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베를루스코니는 떠났지만 우리는 애초에 그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했던 세력들과 대결을 벌여야 한다.



사진 출처: Emic Plaza

베를루스코니의 퇴진을 축하하는 시민들 이 승리를 경제 위기 교통전가에 맞선 싸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마리오 몬티 – 구질서의 인사

마리오 몬티가 이탈리아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다. 그는 선출되지 않았다. 대신에 유럽의 엘리트들이 이탈리아 위기를 ‘해결’하라며 그를 선택했다.

그는 “존엄성이 보장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과제는 유럽중앙은행과 IMF가 요구하는 혹독한 긴축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

몬티는 1995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유럽연합의 관료로 일했다. 그는 유럽 연합 고위 관료 친구들의 말에만 귀 기울일 것이다.

이탈리아의 주요 세력들

이탈리아의 정치적 지배자들은 무능하고 부패했다. 정치 엘리트들은 쓰디쓴 분열과 개인적 경쟁을 거치며 형성된 다양한 정당들로 나뉘어 있다.

북부동맹은 이탈리아 정치를 좌우하는 주요 세력이다. 북부동맹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결정적 순간마다 베를루스코니의 정부를 뒷받침해 줬다.

북부동맹의 당내 분파 중에는 파시스트도 있다. 그들은 반이주민·반로마(집시) 운동을 지속적

으로 벌였다. 북부동맹은 최근 심각한 패배를 겪었다.

공직자 투명성 등을 주장하며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이탈리아 가치당 안에는 중도 우파 포퓰리스트들도 있다. 이탈리아가치당 지도자는 이미 마리오 몬티를 만나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르주아 언론이 꽤 관참은 의회 내 좌파로 묘사하는 급진당도 몬티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차승일

유로존 위기 이해하기 Q&A

정치인들과 언론은 유로존을 휩쓰는 위기를 얘기할 때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유로존 위기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추려서 답한다.

채권이란 무엇인가?

채권은 일종의 빚 문서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1천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자를 주겠다는 증서와 같은 것이 채권이다. 채권은 금융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보통 채권은 약속한 기간 뒤에 받을 수 있는 돈보다 할인돼 거래된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9백8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 채권을

산 사람은 할인된 가격 때문에 얻는 시세 차익과 이자를 합쳐 이득을 본다.

만기일에 돈을 받을 것이 확실한 안정적인 채권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 사려고 하겠지만 불안정한 채권의 가격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간다. 예를 들어 1년 뒤 1천만 원짜리 채권 가격이 9백80만 원, 9백50만 원으로 떨어질수록 수익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 최근 이탈리아채권 수익률이 7퍼센트를 넘으면서 국가 부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는데, 이처럼 국제 수익률은 국가 경제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지표 구실을 한다.

누가 누구를 구제하는가?

유로존 엘리트들은 구제 금융을 ‘구조 계획’이라 부르지만 현실은 꽤나 다르다. 구제 금융으로 받는 돈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다. 돈은 그 나라 정부의 채권을 소유한 국내의 은행들한테 간다.

또, 구제 금융에는 연금·복지 삭감과 공공부문 인력 감축 등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도입하는 단서가 따라 붙는다.

IMF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의 ‘구제 금융’을 제공해 왔다. 한국의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떠올려 보라. 유로존 나라들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한테서 구제 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

왜 유로존이 위기에 빠졌는가?

2008년 위기 전까지 중국·일본·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산유국의 과잉저축이 미국으로 대거 투자됐다. 이 돈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면서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고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로 나타났다.

유럽 내부를 본다면, 2008년 위기 전까지 높은 수익률을 찾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으로 대거 자금이 들어갔고, 그 돈은 기업이나 부동산에 투자됐다. 물론 이 국가들은 유로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기 쉬웠다.

2007~2008년 미국발 위기가 터지자 해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하면서 이들 국가는 경기 침체, 세

수 감소, 금융 기관 손실 등으로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악화된 재정적자 문제는 다시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빚을 안 갚을 수는 없는가?

그리스는 빚 갚기를 거부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2년에 정부를 연속해서 퇴진시킨 대중 저항이 벌어졌고, 8백10억 달러의 빚을 갚기를 거부했다.

당시 사장들이 공장을 폐쇄하려 했을 때,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계속 운영했다. 그리스 노동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안 되는가?

모나 돌 영국 사회주의자

지금 유럽 좌파 사이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다. 어느 것이 국 제주의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 쟁점이다. 모나 돌은 그리스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방 향으로 디폴트하면서 유로존을 탈퇴하면 나 머지 유럽 국가의 긴축 반대 투쟁에 진정한 국제주의적 등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좌파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며 유럽연합과 노동자 국제주의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언론의 유로존 위기 보도에서 되풀이 되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의 긴 축 반대 저항을 비난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유럽의 주요 좌파 정당들은 대체로 이 러한 공격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좌파 진영은 대부분 '게으른 그리스인 대 성실한 독일인'이라는 우 파의 패러다임을 비판하지만, 대개 '유로 존에 반대하는 우파 민족주의 대 좌파의 친EU 국제주의'라는 또 다른 단순 도식을 제시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유럽 좌파 들은 유로존 탈퇴가 민족주의에 굴복하 는 것이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지금 유럽 좌파 사이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커다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 주의자들은 유로존에 남는 것이 모종의 내핍 정책을 수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긴축과 내핍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가 빚 갚기를 거부하고 유로존을 탈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단일 통화

[제2차세계대전 직후] 유럽석탄철강 공동체가 창설되면서 시작된 유럽 통합은 애초부터 유럽 자본의 필요에 복무하는 것이 목표였다. 각 나라 정부가 유럽 수준에서 경제·정치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각국의 주권을 어느 정도 제한했지만, 통합의 이데올로기적 뿌리를 진지하게 문제 삼을 수 있는 민주적 기회는 단 한번도 없었다.

또, 유럽 통합 과정에서 시장 규제가 철폐돼 유럽 노동자들은 더 많이 착취당해야 했다. 단일 통화로 유로가 도입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유로 도입의 주된 동기는 회원국 사이에서 금융 시장 통합을 더 크게 촉진하는 것이었다. 공동 통화 도입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었다. 투자자가 더는 환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에서 부족한 나라로 돈이 흘러가게 돼, 투자 수익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새로운 게 아니었다. 1990년대에 멕시코와 대부분의 동아시아 나라들은 미국 달러에 자국 통화를 고정시켰다. 멕시코와 동아시아 나라들에서처럼, 이 처방은 유로존에서도 잘 작동하는 듯했다. 이런 방식의 문제는 투자자가 더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발견하면 모든 자본 유입이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때때로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독일 수출 부문의 대규모 확장이다. 독일 수출은 주로 유럽연합 나라들에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을 늘리며 성장했다. 이것은 독일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일 뿐 아니라 독일 같은 규모의 경제와 경쟁할 능력이 없는 그리스 같은 다른 유럽연합 나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었다. 위기를 낳은 요인은 독일보다 약한 유로존 나라들의 이른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사진 출처 Magdalen Sakou

10월 18~19일에 벌어진 48시간 총파업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유럽 통합 대신 긴축과 내핍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

바로 유럽연합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자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제 문제는 그리스가 언제 디폴트할 것이냐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가 채무를 어떻게 디폴트할 것이냐다. 그리스의 채무 디폴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리스 지배 계급은 디폴트 이후 틀림없이 유럽연합·IMF식 내핍을 대신해 '그리스식 내핍'을 시행할 것이다. 그리스 민중은 그런 시도에도 저항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폴트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

그리스는 IMF와 유럽연합의 감독 아래 디폴트할 수도 있지만 이들과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다. 과거 그리스가 IMF와 맺은 부채 경감 협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어떠한 방식이든 IMF의 감독을 받는 디폴트는 문제를 키울 뿐이다. 2010년 7월 그리스는 부채를 21퍼센트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리스 국가는 은행에 대규모 지급 보증을 해야 했고 결국 빚이

늘었다. 게다가, 그리스 국가 부채는 더 무니없는 이자율 탓에 급격히 늘었다. 2010년에만 그리스는 대출 이자로 5백10억 유로를 지불했다.

디폴트

지난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그리스 사회당 지도자 파판드레우는 로자 룩셈부르크를 인용하며 그리스가 '사회주의나 야만이나'의 갈림길에 섰다고 선언했다. 파판드레우는 총리가 된 뒤 야만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파판드레우의 말은 야만

11월 30일 영국 총파업

영국으로 확산된 반긴축 투쟁 물결

유럽의 총파업 물결이 영국으로 확산됐다. 11월 30일 영국에서는 2백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도 많은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는 중이기 때문에 참가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영국 최대 노조인 유나이티드와 GMB가 곧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들이 파업에 참가한다면 파업 대열에 수십만 명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11월 30일 파업은 영국 역사상 1백 년 만에 가장 큰 파업이 될 것이다. 이날 영국

은 환골탈태할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이 파켓을 든 노동자와 시위 행렬로 가득찰 것이다. 평생 시위와 파업에 참가한 적이 없던 수많은 사람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노의 근원은 영국 보수당 정부의 긴축 정책이다. 2008년 경제 위기가 발생한 후 보수당 정부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은행들을 살렸다. 이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너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며 '자발적 퇴직'을 강요하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리스의 사례는 이것이 공격의 출발에 불과함을 보여 준다. 전 세계 경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지금 정부는 반복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려 할 것이다.

그러나 영국 노동자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동일한 이유에서 싸우고 있는 그리스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영감을 얻었다. 또, 뉴욕 월가에서 시작해 영국으로 확산된 '점거하라' 운동에서 투쟁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인했다.

보수당 정부의 긴축 정책 때문에 최근 등록금이 폭등한 학생들은 노동자들과 연대하려고 같은 날 거리로 나설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학생들의 투쟁은 동

적인 정책들에 맞설 대안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했다. 긴축과 내핍을 물리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있는 세력은 그리스 노동계급뿐이다.

진정한 디폴트는 어떠한지 사회주의자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채무를 부정하고 부채 상환을 거절하게 되면 그리스 국가 채권을 다량 보유한 그리스 은행들이 무너질 것이고 곧장 정부한테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구제받을 것이냐의 문제 즉 은행과 돈 많은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와 연금 생활자들이 구제받을 것이냐의 문제는 계급투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은행들을 그리스 노동자 통제 아래 두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의 유로존 강제 퇴출을 뜻하더라도, 사회주의자가 그것을 애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만약 좌파가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족주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긴축과 내핍에 진지하게 맞서는 것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디폴트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유럽연합이나 IMF의 긴축 조치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스 노동계급의 전투성은 급진적 대안을 실현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스가 채무를 디폴트한다면 그것은 유럽 전역의 긴축 반대 투쟁들에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것이다. 그것은 기업주들의 통화 동맹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국제주의의 토대를 놓을 것이다.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위기는 '다른 유럽' 즉 유럽 노동자들의 이익에 따라 통치되는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번역 김용욱

이렇게 생각한다

이 체제의 지배자들에게는 해결책이 없다

세계 지배자들은 그리스의 파판드레우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사임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치인들을 대신해 '기술 관료들'이 총리가 됐다. 이제 그리스에서는 루카스 파파데모스가, 이탈리아에서는 마리오 몬티가 총리가 됐다.

지배계급들은 이들을 '전문가'라고 찬양하면서 이들이 유로존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배자들은 자본주의를 '잘 아는' 이들을 임명하면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이다. 즉,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하다. 지배자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파파데모스와 몬티가 전문가로 여겨지는 것은 이들이 은행가 출신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가들이 위기를 피하는 법을 그토록 잘 안다면 전 세계 경제 위기는 애당초 왜 발생했는가?

호황과 불황이 발생하는 것은 지배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관해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호황과 불황은 체제의 태생적 특성이다. 지배자들은 이

점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결국, 지배자들은 이윤율을 회복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전문 관료들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지에 상관없이 자본주의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일어서 체제를 변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점거하라’ 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나 풍선껌 다 씹었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 노동운동사를 다룬 명저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창작과비평사)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한 좌파 저술가이자 미국 거주 사회주의자다. 도시 환경 문제를 다룬 《슬럼, 지구를 뒤덮다》를 비롯해 《조류독감》, 《제국에 반대하고 야만인을 예찬하다》,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 《자본주의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등이 국내에 번역·출간돼 있다.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이 등장하고 이것이 야생화처럼 전국을 수놓을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가?

물론, 영화감독 존 카펜터는 미리 알았을지도 모른다. 25년 전인 1988년에 이 ‘공포의 마술사’는 《화성인 침략 소동》이란 영화의 각본을 쓰고 감독했다. 그는 이 영화에서 레이건 대통령 시대를 재앙적인 외계인 침략에 비유했다. 영화 초반부에는 제3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초대형 빈민촌 모습이 할리우드 프리웨이 넘어 병커힐 기업 본부의 유리벽 위로 비치는 매우 뛰어난 장면이 있다.

《화성인 침략 소동》은 카펜터의 영화 중에서도 가장 가치 전복적이다. 영화에서 억만장자 은행가, 사악한 언론 재벌, 그들의 좀비들이 텐트촌에 살면서 일자리를 구걸하는 가난한 미국 노동계급을 지배하는 상황을 묘사한 장면은 정말 잊기 힘들다.

모두가 노숙을 하고 절망에 빠진 부정적 평등과 (로디 파이퍼가 연기한) 나다가 발견한 마법의 색안경 덕분에 미국 프롤레타리아들은 마침내 인종을 뛰어넘은 연대를 달성한다. 그들은 [안경 덕분에]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기만하는지 꿰뚫어 보고는[영화에서 화성인들은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해 자신의 원래 모습을 감춘다] 크게 분노한다. 무지무지하게 분노하게 된다.

물론, 현 상황은 아직 여기까지 진척되지는 않았다. ‘세계를 점거하라’는 운동은 아직 자신의 마법의 안경(강령, 요구, 전략 등등)을 찾고 있고 이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아직 간디처럼 점잖다. 그러나 카펜터가 예언했듯이 충분히 많은 미국인이 자기 집과 일자리에 쫓겨나면(또, 수백만 명이 그런 공포에 시달리면), 무언가 새롭고 거대한 것이 골드만삭스를 향해 어슬렁거리며 걸어가게 될 것이다. 또, ‘티파티’와 달리 이 운동은 ‘배후 조종 세력’이 없다.

1965년 내가 18살로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 모임의 간부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체이스맨하탄 은행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 나는 이 은행이 평화 시위대를 학살한 남아공 정부를 지원하는 ‘아파트헤이트 파트너’ 구실을 하는 것에 항의하고 싶었다. 이것은 거의 30년 만에 월가에서 벌어진 최초의 시위였고 뉴욕 경찰은 시위 참가자 41명을 개처럼 끌어냈다.

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 운동이 거리를 점거하면서 노숙자들과 존재론적 동질성을 형성한 것이다.

(물론 공민권 운동에서 훈련받은 우리 세대라면 먼저 월가의 건물 안을 점거하고 경찰이 우리를 두들겨 패며 끌어내길 기다렸을 것이다. 오늘날 경찰들은 최루액을 뿌리고 ‘고통에 의한 설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는 여전히 월가의 마천루들을 점거하는 것이 좋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투쟁이 더 발전했을 때 하면 된다.

‘점거하라’ 운동이 천재적인 것은 이 운동이 일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을 해방시키고, 사유화된 광장을 사람들을 모으는 공공장소이자 저항을 낳는 촉매로 만든 것이다.

46년 전에 내가 참가한 월가 연좌시위는 게릴라 공격이었다. 이번 월가 점거 시위는 [걸리버 여행기처럼] 소인국 사람들이 거인을 포위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흔히 낡은 것으로 생각되는 일대일 설득에 의한 조직 원칙의 승리다. 물론, ‘사회적 미디어’가 중요한 구실을 했지만 전지전능하지는 않았다.

‘노동자와 히피의 단결’

활동가 조직 —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명확해진 정치적 의지 — 은 여전히 현실의 도시 토론 광장 속에서 성장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 대화란 것은 합창대에게 설교하는 것과 같다. ‘무브온 닷컴’과 같은 초대형 사이트조차 이미 ‘개종한’ 사람들이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인구 집단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

월가 점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좌절하고 소외된 진보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에너지가 집결되는 피뢰침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운동은 위태로운 중년 학교 교사와 젊고 배고픈 대학 졸업생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통점을 제공하면서 세대 간 장벽을 무수는 듯이 보인다.

좀더 급진적인 측면을 보자면, 점거 캠프는 닉슨 대통령 시대 이후로 나타난 뉴딜 연합 사이의 분열을 치료하는 상징적 공간이 됐다. 존 위너가 자신의 푹푹한 블로그(www.TheNation.com)에서 지적했듯이 “안전모와 히피들, 드디어 단결했다.”

정말 그렇다. 1989년 피츠톤 석탄에 맞서 고통스럽지만 결국 승리한 파업 투쟁을 벌이던 중 광원들과 함께 월가로 원정 투쟁을 왔던 현 미국 노총 위원장 리차드 트럼카가 뉴욕 경찰의 주코터 공원 공격이 압박한 상황에서 자기 동료 여성과 남성 광원들에게 공원을 함께 지키자고 호소했을 때 누가 감동하지 않았겠는가?

나 같은 왕년의 급진주의자들은 새로

운 운동이 나타날 때마다 ‘드디어 구세주가 왔다’고 호들갑을 떨기 쉽다. 그러나 이번 월가 점거 운동 뒤에는 휘황이 떠 있다. 나는 이 운동이 대공황 시대 이주민과 파업 노동자 등이 보여 줬던, 내 부모 세대가 보여 줬던 자질들을 다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위험한’ 평등주의 윤리에 바탕을 둔 폭넓고 자생적인 연대 정신을 말이다.

당시 이런 말이 있었다. ‘떠도는 가족들을 보면 차를 멈추고 태워 줘라’, ‘집세를 못내 쫓겨날 지경이더라도 절대 파업 대열을 이탈하지 마라’, ‘마지막 담배를 이방인과 나눠 피라’, ‘아이가 굶고 있으면 우유를 훔쳐라. 훔친 우유의 절반을 이웃 집 굶는 아이에게 줘라’, ‘존엄성을 빼고 다 잃은 매우 조용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라는 말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라.’ 내 어머니는 1936년 파업 때 바로 이런 가치들을 실천하셨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이, 사회계급, 인종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점거를 보호하려 달려갔던 사람들에게 내가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나는 노숙자 형제자매들처럼 추운 거리에서 다가올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점거하라’ 운동의 배짱 두둑한 청년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다시 전략 얘기를 해야겠다. (레닌이 말한 의미에서) 다음번 잡아야 하는 고리는 어디일까?

운동의 전략

이 야생화들이 대화를 열어 강령과 요구를 채택하고 자신을 2012년 선거 경매에 매물로 내놓아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존재할까? 오바마와 민주당은 야생화의 에너지와 진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월가 점거자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놀라운 조직 과정을 쉽게 매물로 내놓을 것 같지 않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운동을 매물로 내놓는 것보다는] 아나키스트의 입장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첫째, 99퍼센트의 고통을 폭로하고 월가를 재판하자. 해리스버그, 로레도, 리버사이드, 캄펜, 플린트, 껄껄과 홀리스프링스[모두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으로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급등한 지역]를 뉴욕 시내로 데려 오자. 포식자들과 희생자들을 대질시키자. 경제적 대량 학살에 대한 국가 재판을 벌이자.

둘째, 공공장소를 민주화하고 생산적으로 점거하자(즉, 공통의 자산을 되찾는

것이다). 뉴욕 브롱스 지역의 베테랑 활동가이자 역사가인 마크 내슨은 뉴욕의 버려진 장소들을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과 실업자 등을 위한 생활 자원(정원, 캠프장, 놀이터)으로 바꾸자는 대담한 주장을 했다. 미국 전역의 ‘점거하라’ 시위 참가자들은 이제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공원과 텐트에서 자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게 됐다. 따라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보호하는 자물쇠와 담장들을 부숴야 할 이유가 더 명백해졌을 것이다.

셋째, 진정한 성과에 집중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에게 매기는 세금을 높이거나 은행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 즉, 보통 사람들이 사회투자, 이자율, 자본 이동, 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 같은 거시적 문제들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다. 경제 권력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면 뒤쳐진 논의가 되는 것이다.

넷째, 다가올 봄에 권력을 놓고 다투려면 이 운동은 옮겨울을 잘 넘겨야 한다. 1월의 거리는 매우 춥다. 뉴욕 시장 블룸버그와 다른 도시의 시장 들은 매서운 겨울 추위가 시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긴 크리스마스 휴일 동안 점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차분해야 한다. 이 운동의 여정은 1백 퍼센트 예측 불가능했다. 그러나 일단 피뢰침이 설치되면 결국 번개가 내리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뉴욕 타임스>가 인터뷰한 은행가들을 보면, 그들은 월가 점거 시위 참가자들을 금융 부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귀찮은 존재들로 생각한다. 은행가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벌벌 떨어야 마땅하다.

1987년부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손소독의 절반을 잃었다. 히스패닉계들은 무려 3분의 2를 잃었다. 2000년부터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5백50만 개가 사라졌고 공장 4만 2천 곳이 문을 닫았고 지금 대학 졸업생 한 세대가 미국 역사상 최악인 ‘밀바닥으로의 경주’로 내몰리고 있다.

[은행가들이] 미국의 꿈을 산산조각 냈으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은행가들에게 고통을 줄 차례다. 혹은 카펜터의 위대한 영화에서 나다가 자신을 경솔하게 공격한 불한당들을 향해 했던 말을 떠올려보자. “나는 풍선껌을 씹은 후 네놈들을 두들겨 패려고 여기 왔다. … 자 이제 나 풍선껌 다 씹었다.”

번역 김용욱

낙태금지법에 대한 현재 공개변론

수정란보다 여성의 삶이 우선이다



11월 10일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기자회견

11월 10일, 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 등 전문가가 여성의 청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왔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조항이 헌법의 신체 자율권,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청구인 쪽에서는 낙태 금지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미 사문화된 법이며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놀랍게도 법무부의 반론은 ‘조산사는 임부 자신이 아니니 신체자율권을 청구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낙태할 수 있는 여성이 어디 있단 말인가. 법이 단순히 종이조각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문서라는 것을 완전히 잊은 듯 보였다.

청구인과 법무부 모두 변론의 초점은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가’였다. 법무부가 “수정란은 이미 46개의 염색체를 지닌 인간”이라고 강변하는 데 맞서, 청구인 쪽 참고인인 법여성학자 양현아 교수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가장 괴로움을 겪는 사람은 임부 자신이며, 태아는 ‘임부 자신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낙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

고 해도 존재 자체로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를 유지시킬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아는 임신부의 일부

하지만 낙태 단속 캠페인이 벌어진 지난해 초, 그 ‘예방효과’는 여성들을 위축시켜 자괴감을 갖도록 하는 효과, 음성적으로 병원을 찾다가 낙태해 주겠다고 유인한 사람에게 섹스행동하는 효과, 아이를 낳아서 질식사 시킨 뒤 울며 거리를 헤매다 구속되는 효과로 나타났다.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과 후에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

택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중요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의 몸을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여성 은 성관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몸을 국가나 사회적 통제,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다.

이서영

이란을 위협하는 서방 제국주의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지배자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G20 정상회담을 이용해 이란에 대한 “전례없는 국제적 압력”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한 해군 전함과 잠수함을 이란 국경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는 “선제” 공격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방 지도자들은 다시 한 번 이란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말잔치들은 2003년 이라크 침략을 앞두고 유행했던 ‘카더라 문서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라크 침략의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였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다.

이란 핵무기에 대한 서방의 태도는 위선적이다. 중동 지역에서 핵무장을 한 유일한 나라는 서방의 동맹국 이스라엘이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한편,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은 최근 들어 부쩍 동아시아를 신경쓰고 있다.

지난달 동아시아를 순방한 미국 국방부 장관 리언 파네타는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 남을 것이며 이 지역 주둔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강조점이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도 제기됐다.

게다가 미국은 이라크에서 사실상 쫓겨 나오며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아랍혁명 발발로 중동에 대한 서방의 패권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공격설'은 미국이 여전히 중동에서 힘을 뽐 생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핵심 자원인 석유가 나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중동에서 손 뿔 수 없는 처지다. 중국을 견제하려 해도 중동 석유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의 전략적 재앙'으로 끝났기 때문이라도, 더더욱 미국은 이 지역에서 권위를 회복할 기회를 노리게 될 것이다.

이란 전쟁 위협은 중동 지역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유엔, 미국, 유럽연합은 이미 이란에 대해 많은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제재 조치들은 이란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합돼 평범한 이란인들을 혹독한 경제적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2009년 이란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폭발했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올해 이집트와 튀니지 혁명에 연대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시작됐다.

만약 제국주의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이란인들뿐 아니라 아랍의 혁명적 물결 전체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

차승일



서방의 제국주의가 서방을 출구로 만든 적이 없다.

폭격으로 쑥대밭이 된 집 주변을 바라보는 가자 지구의 어린이 |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개입은 단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다.

이스라엘 — 제국주의의 경비전

최근 이스라엘 대통령 페레스는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군사적 수단이 외교적 수단보다 더 가까이 있다” 하고 말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에 앞장서며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자신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은 건국 자체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던 나라다.

19세기 말 유럽 거주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에 대응해 등장한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 시온주의는 독자적인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면 유대인 억압이 해결될 거라고 주장했다.

시온주의 운동 지도자들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에 빌붙는 방식으로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

영국 정부는 유대인 이주자들이 영국의 중동 식민지 지배를 도와줄 거라는 시온주의 지도자들의 말을 받아들여 1917년에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다.

아랍 세계 한복판에 건설되는 시온주의 식민지가 일종의 군사요새가 돼, 서쪽으로는 수에즈운하를 확실히 지배하고 동쪽으로는 영국령 메소포타미아(나중에 이라크로 이름이 바뀜)에서 생산되는 석유 공급을 확실히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온주의 식민국가인 이스라엘은 60여년 전인 1948년에 1백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기 고향에서 내쫓는 만행을 저지른 후에 탄생했다. 아랍에서 이 만행은 ‘나크바[재앙]’로 알려져 있다.

시온주의

예를 들어, 1947년 12월 18일 갈릴리의 키사스 마을에서 유대인 민병대들은 한밤중에 팔레스타인 거주지에 폭탄을 던져 팔레스타인 사람 15명을 살해했다. 또, 1948년 4월 데이르 야신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 90명이 학살당했다. 그중 3분의 1 이상이 영아였다.

이런 무차별 학살 뒤에는 냉혹한 계산이 있었다. 학살자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런 대량 학살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려 자기 마을에서 도망치기를 바랐다.

미국과 소련 같은 초강대국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지원했고, 탄생 후에는 즉각 국가로 인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난민 숫자는 85만 명으로 늘었다. 난민들은 쟁전 한 톨 없었고, 대량 학살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들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서안, 가자 지구의 난민촌에 정착했다. 난민촌의 상황은 끔찍했다.

20세기 후반에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의 후원자가 됐다. 미국의 닉슨 정부는 1960년대 말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뒤 이스라엘에 군사·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이스라엘을 이용해, 아랍 세계가 항구적인 공포와 굴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20세기 말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군사·재정 지원은 1천억 달러나 됐다. 이 수치에 견주면, 미국이 다른 후원국들에 제공한 지원은 보잘것없다.

21세기에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이데올로기에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 추가됐다. 특히, 이란과 같은 ‘이슬람주의 정권이나 이슬람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폭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고, 중동 각국 국민의 민주적 의사와 무관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논리였다.

이스라엘 국가는 이번에도 중동에서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아랍 민중을 억누르고 물어뜯는 ‘경비전’ 노릇을 충실히 함으로써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하려 한다.

강동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인간사냥’ 중단하라!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기획위원

정부의 살인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결국 또 비극을 낳았다. 11월 7일 서울출입국이 ‘할당량’을 채우려고 김포까지 나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중국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서울출입국은 그가 “평소 심장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직원들이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한다며 발뺌한다. 심지어 응급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을 하는 영상을 찍어 두었다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함께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은 그가 힘겹게 도망치다 붙잡힌 직후부터 심상치 않아 보여 출입국 직원들에게 조치를 요구했으나 모른 척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뒤늦게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서울 출입국은 이런 진술을

한 동료 노동자들을 이번 주에 모두 급히 출국시켜 버렸다.

이런 비극은 처음이 아니다. 2008년에도 버마 이주노동자 파소에 씨가 단속에서 잡힌 후 심장 통증을 호소했으나 적



11월 16일 서울출입국 앞 이주노동자 단속 항의 시위

평소 심장

절한 조처가 없어 사망했다. 몇 달 전에도 출입국과 경찰이 ‘도박’을 단속한다며 모텔에 난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하며 단속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들 모두 폭력적인 단속 과정이 재앙을 부른 원인이었다. 이렇게 그동안 이주노동자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적 단속 과정에서만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간 것은 아니다.

‘할당량’

16년간 한국에서 일해 온 필리핀 이주노동자 래니 사손 씨가 지난 10월에 창문도 없는 1평 남짓한 고시원 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는 평소 지병이 있었으나 미등록 신분 때문에 단속될까 봐 두려워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고된 일을 하다 쓸쓸히 죽었다.

한 달 뒤 필리핀 미등록 이주노동자 나랏 윌리엄 바리안 씨도 지하 창고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 역시 지병이 있는 데도 매일 야간 노동을 했고 병원비와 단속 때문에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다. 이런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사망자 수는 몇 곱절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은 이런 죽음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가스 총을 들고 공장에 난입하는 등 더 공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런 출입국을 규탄하기 위해 11월 16일 서울출입국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고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싸움이 시작됐다. 이 집회에 급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서울일반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이 참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또 최근 대구출입국 단속반은 경주 외 동공단의 한 사업장에서 막무가내로 단

속을 벌이다 노조의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급속노조 지회의 지회장을 비롯한 경주 지역 노조 활동가 4명이 단속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연행됐고, 또 단속과 활동가들 연행에 항의한 대구 이주연대회의 활동가 8명도 연행됐다.

검찰은 이 노조 지회장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그러나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이 폭력적으로 끌려가는 것에 맞서 싸운 것은 매우 정당하다. 이 정당하고 자랑스런 활동을 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대구 성서공단노조 활동가 임복남 동지의 말처럼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적극 방어하는 데 주축 되지 않게 하려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는 운동은 지속돼야 하고 연대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낳는 재앙을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다. 벌써 열아홉 명째 죽음을 맞이한 쌍용차 노동자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 세 명 중 한 명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 ... 이런 고통이 체제에 넓게 퍼져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주의가 낳는 비효율과 모순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최근 미국에서 주택 7백만 채가 압류됐다. 그 이후 우리는 빈집과 집 없는 사람들을 갖게 됐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 말이다.

장하준 교수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시장 자본주의의 실패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자유시장 정책의 결과 “미국 CEO들은 노동자들보다 3백~4백 배”나 많은 보수를 받는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실패”했고, “소득 불평등”만 심화시켰다.

최근 하버드대 학생들이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맨큐 교수의 강의를 거부한 일도 자유시장 변호론의 파산을 보여 줬다. 학생들은 맨큐 교수의 수업이 “탐욕스런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한다”며 거부하고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했다. 2008년 영국 여왕이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를 방문해 “왜 아무도 경제 위기를 예상하지 못했소?” 하고 질책한 일화는 주류 경제학과 학자들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런 실패한 자본주의가 아닌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열망은 광범하다.

따뜻한 자본주의?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나서서 탐욕적인 금융자본과 기업을 통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따뜻한 복지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 기업도 안철수가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있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구현하려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윤이 아닌 민주주의와 사람들의 필요를 실현하려는 생활협동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런 바람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가 이런 가치와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팔리지도 않을 아파트와 노숙자 자본주의적인 이윤 논리를 벗어나면 대안이 보인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삶,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 환경 등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 게다가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경쟁 때문에 과잉생산·과잉투자와 투기 거품이 일어나고 결국은 점점 더 깊고 회복하기 힘든 경제 위기로 빠져든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지금 다시 더블딕으로 빠져드는 세계경제가 바로 그것을 보여 줬다.

이 때문에 스웨덴 같은 복지 국가도 1990년대 이후 연금 제도를 개악하고, 보육시설을 축소하는 등 복지를 후퇴시켰다. 세계적 석학 이매뉴얼 월러스틴도 자본주의가 갈수록 심한 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적 해법은 환상이 됐다”며 계급타협적 복지 국가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생활협동조합 같은

소규모 대안 경제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도 자본주의 내에서는 한계에 부딪쳐 왔다. 대안 경제모델들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수익을 내야 하므로 이윤을 위해 운영하는 다른 기업들을 닮아 갈 수밖에 없었다. 최근 원주의 사회적 기업 다자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참여하면서 반노동자적인 일을 벌이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윤을 위한 눈먼 체제인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동안 환경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에너지기구도 세계가 5년 안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를 막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서 이제 점증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긴장은 미래에 핵무장 열강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결국 인

류는 나쁜 자본주의나 좋은 자본주의냐의 선택이 아니라 변혁인가 야만인가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것이다.

변혁인가 야만인가

환경을 살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이윤을 위한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민주적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민주적 계획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런 사회는 옛 소련식 관료적 지령 경제와는 전혀 다른 사회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민주적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장하준 교수는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사회는 전기를 얼마나 생산할지, 전 세계에 공급하기 위해 석유를 얼마나 시추할지 등 이미 매우 많은 부분을 계획한다. 문제는 이윤을 위한 경쟁 때문에 이런 계획

이 왜곡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윤을 위한 경쟁이 없으면 자본주의에서 봤던 창조성이 나 역동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창조성의 진정한 동력은 경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은 “사회정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열정적 감각”이 자신의 연구 동기라고 말했다. 현대 사회를 보더라도 진정한 연구 계발은 집단적인 계획과 조직을 통해 이뤄진다. 1950~80년대 미국에서도 전체 연구 개발비 가운데 47~65퍼센트는 정부 지원금이다. 다수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는 사회라면 더 큰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가장 잘 부합해 영원할 체제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수만 년이 넘는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고작 4백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일시적인 체제일 뿐이다.

봉건제 내에서 봉건 지배권력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날 이윤 논리에 맞서는 유럽 노동자 투쟁, 미국 월가 시위 그리고 한국의 한미FTA 반대, 복지 확대, 반값 등록금,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운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도 싹틀 수 있을 것이다.

30년 독재자도 3주 만에 무너뜨린 아랍혁명은 급진적인 변화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대중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는 단지 상상 속의 이상만은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1871년 파리 코뮌에서 노동자·대중이 스스로 통제하고 운영하는 사회의 맹아를 봤다.

당시 노동자와 억압받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파리를 두 달 동안 통제했다. 코뮌은 모든 공직자를 선출하며 매우 민주적으로 운영됐고, 야간 노동을 폐지하고 아이들에게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오늘날 우리도 아직 성취하지 못한 개혁을 이뤘다.

이후 1917년 러시아, 1918~19년 독일, 1956년 헝가리, 1978~79년 이란 등 체제를 뒤흔드는 혁명이 벌어질 때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적인 대안 권력의 모델들이 만들어졌다.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오늘날, 이런 대안은 더 절실하다.

정선영

한국외국어대

본분교 통합을 위한 용인·서울 학생들의 소중한 연대



용인 캠퍼스 총궐기에 참가한 서울 캠퍼스 학생들

박혜신 한국외대 중국어대 학생회장, 다함께 한국외대 모임

11월 9일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에서는 본분교 통합을 촉구하는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다함께’ 한국외대모임은 연대하고자 이 집회에 참가했다. 서울캠퍼스에도 차별받는 학생들의 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단결과 투쟁을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용인캠퍼스 여기저기 총궐기를 알리는 배너와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총궐기에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2백여 명이 참가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학생들도 꽤 많았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우리들을 적극 환영했다. 중국어대 학생회장인 나와 다함께 외대모임 활동가는 집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다. “차별과 구조조정 없는 본분교 통합”을 지지하고 “서울과 용인 학우들의 단결과 투쟁을 호소”한 우리의 연설에 큰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가져간 리플릿과 외대 소식이 실린 《레프트21》신문은 금세 품이 닳았다.

학생회장들의 발언에서는 큰 위기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차별을 철폐하자”, “학벌주의 타파하자”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학교 당국을 비판하며 본분교 통합 추진, 복수전공 원안 유지, 학생 복지 요구 쟁취 등으로 투쟁의 요구를 올바르게 모으고 있었다.

단결과 투쟁

특히 최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요구로 복수전공 요건이 강화돼 용인캠퍼스 학생 48명이 다음 학기에 서울 캠퍼

스에서 복수전공을 못 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가 가장 가슴이 찡했다. 평소 학생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학교가 이로써 쉽게 복수전공 요건 강화를 받아들인 건 정말 유감이다.

이날 용인캠퍼스 김기정 총학생회장은 식발했다. 학생들은 이 집회 후 총장실을 향의 방문하고 각자 쓴 요구안 메모지를 총장실 안팎에 붙였다. 학생회장들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15일에 열린 비상총회는 1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성사됐다.

다함께 외대모임 회원들은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지지를 눈으로 보면서 그간 우리의 주장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 또 서울과 용인 학생들 간 단결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자부심도 느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벌주의적으로 주장하며 통합을 훼방 놓고, 최근에는 심지어 서울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용인 학생들의 학생회 선거권을 박탈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과 학벌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적 압력은 총학생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총학생회는 자신이 한 학벌주의적인 주장과 모순되게도, 학교와 협상할 때는 본분교 통합을 조건부 찬성했다. 결국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거짓으로 선동한 꼴이 됐다.

앞으로도 우리는 용인캠퍼스 학생들과 연대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과 구조조정 없는 본분교 통합을 요구하며, 학벌주의에 맞서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1월 28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삼화고속

37일간의 파업이 승리하다

민주버스노조 삼화고속지회가 37일간의 파업 끝에 승리를 거뒀다.

합의 결과가 애초 노조의 요구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반적으로 임금 이 인상되는 효과를 거뒀다.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의 여지도 생겼다. 무엇보다 민주노조 건설 이후 첫 임단협(임금·단체협약) 투쟁에서 성과를 내 조직과 자신감 측면에서도 전진했을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삼화고속 파업이 ‘5만 시민의 발을 붙잡고 있다’며 비난 공세를 펴부었지만,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의 연대가 계

속 이어졌다. 전반적 여론도 노동자들에게 유리했다. 나대진 지회장의 말처럼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 삼화고속 노조 투쟁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결국 이런 여론 때문에 인천시의회가 삼화고속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측은 더는 버틸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송영길이 시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는 오랫동안 파업을 수수방관했고, 심지어 사측과 오랜 유착관계에 있던 인천시 건설교통국이 나서 사측

의 편에 서기도 했다. 게다가 인천시는 재정적자를 핑계대며 공영제의 필요성에 눈을 감고, 오히려 파업 효과를 방지할 목적으로 삼화고속의 노선 점유율을 30퍼센트로 줄이고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점은 민주당 지방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도움이 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파업은 승리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투쟁은 이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은화

세종호텔

조합원들의 동참이 늘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은 민주노조의 힘을 무력화하려고 부위원장인 나를 포함해 임원·대의원, 열성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냈다. 내게 세종호텔은 18년간 근무한 첫 직장이며, 내 후배들의 사랑하는 직장이고 삶의 터전이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조 탄압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고, 호텔 정문에서 1인 시위로 시작했다. 외부 홍보전을 포함해 연대 집회, 1일 천파 농성,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 초기에는 자신 없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조합원들이 투쟁의 대열에 열심히 동참해 줄까? 노조 간부들만의 싸움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투쟁은 처음인데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기우였다. 투쟁이 시작되자 꼭두새벽에 출근하고 휴일도 반납하며 동참하는 조합원들이 조금씩 늘었다.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에 열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전 집회는 세종호텔 정문에서 치러졌다. 우리 투쟁에 연대하는 의미였다.

집회 시간이 임박하자, 일요일인데도 사측 관리자들이 총 출동해 근무자의 집회 참가를 제지하고 징계로 협박했다. 그러나 많은 조합원들이 당당히 이를 뿌리치고 집회에 나왔다. 객실정비팀에선 일부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동료들을 집회에 참가시키려고 일부러 출근해 일을 도와주다가 손을 잡고 함



양종근 기자

11월 13일 5백여 연대 인파 속에 환호하는 세종호텔 노동자

게 나왔다.

집회 열기는 뜨거웠다. 세종호텔은 ‘단결! 투쟁!’의 합성으로 뒤덮였고 5백여 명의 연대에 조합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이런 투쟁 열기는 전국노동자대회로도 이어졌다. 밤새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조합원들도, 야간에 출근해야 하는 조합원들도 본대회가 열리는 서울시청으로 향했다.

이후 사측은 근무시간에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징계하려고 경위서를 요구했으나, 동료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단체협약에 보장된 합법적인 교육시간이다”, “징계할 테면 해라. 난 경위서는 못 쓰겠다.”

앞으로도 사측은 우리를 탄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주보 세종호텔 노조 부위원장

국민대 총학생회 선거

편파적 선관위에 사발로 항의한 좌파 후보

국민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99%의 역습'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당한 자격 박탈에 맞서 싸우고 있다. 14일에는 후보로 나온 두 여학생이 곱게 기른 머리를 자르는 사발식까지 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99%의 역습’ 선본은 부적절하게 학교측과 등록금 인상을 합의한 현 총학생회 집행부를 비판하며, 투쟁하는 학생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현 총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99%의 역습’ 선본의 홍보물 내용을 문제 삼으며 선본 자격을 박탈했다.

총학생회의 등록금 인상 합의에 동조한 상대 후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또 중선관위는 ‘선거 운동원들의 옷 색깔이 겹치면 안 된다’며 시행세칙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이미 만들어 놓은 단체복을 입지 못하게 했다.

‘99%의 역습’ 선본은 이런 부당한 탄압을 규탄했다.

“선관위 부위원장들은 비판도 안 되고, 비난도 안 되고, 후보자의 과거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가장 활발해야 할 선거철에 비판

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막는 것입니다.”(이아혜 정후보)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탄압입니다. 유일하게 학교 당국의 등록금 인상에 맞서 왔던 후보가 등록금 인상을 옹호했던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 당했습니다. 너무나 부당합니다.”(김샘 부후보)

‘99%의 역습’ 선본은 학생 4백여 명에게 탄원서를 받아 징계 철회를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99%의 역습’ 선본은 선거 보이콧을 조직하며 재선거 실시를 내걸고 싸우고 있다.

정성연

독자토론광장

11월 28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심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한나라당과 교원평가 야합하는 민주당 안민석

나는 최근 전교조로부터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여야 합의로 교원평가를 법제화하려하니 항의전화를 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걸었는데, 안민석 의원이 전화를 받았다.

안민석은 한나라당 핑계를 대며 답변을 회피했고, ‘교사의 80퍼센트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를 왜 법제화하려고 하나’고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날 실제로 안민석은 교원평가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려 했지만, 이날 오전에 열린 6자협의체에서 전교조가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겨우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교육개혁의 동반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사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교원평가에 찬성하고 있다. 6자협의체는 교원평가 폐지가 아닌 ‘조율’을 위한 기구이고, 민주당은 교과부의 교원평가를 약간만 수정해 한나라당이 합의할 수준으로 통과시키려 한다. 따라서 6자협의체 안에서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교원평가를 저지할 수 없다.

전교조 지도부는 6자 협의체에서 나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김연오 전교조 교사

동료 교원평가에 불참합시다

교원 전문성을 기른다면 도입된 교원평가는 지난해 많은 문제점만 드러냈습니다. 학부모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몰라 학부모 평가 참여도는 바닥을 맴돌았습니다.

제 지인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최하점을 주는 바람에 연세 지긋한 선배 교사가 재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 굴러간 바퀴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 것처럼, 교원평가는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육에서 교사·학생·학부모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 견제하고 점수를 매기게 한다면 그 관계는 더는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일 수 없습니다.

교원평가를 먼저 도입한 미국·일본 등의 사례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생 성적을 교원평가의 지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적 조작, 답 알려주기 등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낮은 점수를 받아 교단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원평가는 정부의 경쟁교육 방침에 따라 교사들을 쫓 세우는 정책입니다. 경쟁은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생기지요. 누군가는 반드시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교원평가가 교사들의 긍정적인 자기 성찰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 않음을 우

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 좀 더 나은 연수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루하루 수업과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료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니다. 동료 평가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경험상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의 최홍이 교육위원은 동료 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공지했는지 묻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공감하신다면 브레이크를 밟는 또 하나의 다리가 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미연 전교조 교사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들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토론회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 경제 위기와 인종차별 그리고 이주노동자 투쟁

연사: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기획위원)

일시: 12월 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3층(충대입구 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토론회

국제 점거 운동과 21세기 반자본주의

연사: 김인식 (다함께 활동가)

일시: 12월 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교육문화센터 602호 (답십리역 4번 출구 도시철도공사 뒤)

참가비: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070-8877-5533

다함께 서울 남부 공개토론회

‘99퍼센트의 저항’과 21세기 반자본주의

연사: 최영준 (99퍼센트행동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다함께 연대협력국장)

일시: 12월 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모임전문공간 모토 8실 (강남역 12번 출구 30미터 강남제일빌딩 8층)

참가비: 4천 원

문의: 02-416-0963, 010-4545-4797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토론회

위기, 저항 그리고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화역 4번 출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연락: 02-6338-2395

다함께 서울 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99-13 3층 303호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2-6338-2395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ibforum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89-2 201호





탄압 속에서도 전진하는 ‘점거하라’ 운동

최근 미국 전역에서 ‘점거하라’ 운동이 탄압 당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 경찰은 ‘덴버를 점거하라’ 운동 참가자들을 캠프에서 몰아냈다.

뉴욕 바깥에서 가장 큰 ‘점거하라’ 캠프는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 있다. 11월 12일 시위대 8천 명이 경찰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11월 13일 캠프를 강제철거했다.

11월 14일 새벽 뉴욕 주의 ‘로체스터를 점거하라’ 운동은 지역 노동운동과 뉴욕 시민자유연합의 지원 덕분에 캠프를 유지할 수 있었다.

11월 14일 새벽 경찰은 ‘오를랜드를 점거하라’ 캠프를 철거했다. 이에 항의해 부시장과 일부 고위 시 공무원들이 사임했다. 이날 오후 4시 2천 명이 시청 앞 광장을 점거했다.

11월 15일 새벽 경찰은 ‘월가를 점거하라’ 캠프에도 경찰을 투입했다.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했지만 경찰은 폭력을 휘두르고 시위대를 체포했다.

오를랜드 경찰은 이미 10월 25일 고무 총과 최루가스를 쓰며 ‘오를랜드를 점거하라’ 운동을 공격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참전군인 스캇 올센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10월 26일 시위대는 다시 점거를 시작했고 11월 2일 총파업을 호소했다. 11월 2일 1만 5천 명이 행진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인 오를랜드 항구의 작동을 중단시켰다. 오를랜드 사례는 탄압에 맞서는 최고의 방법은 투쟁을 더 키우는 것임을 보여 줬다.

고무적이기도 오를랜드와 포틀랜드 등 여러 도시에서 ‘월가를 점거하라’가 제17일 시위를 전국 행동의 날로 조직하지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 전 날에는 학생들의 대규모 수업거부가 예정돼 있다.

우파 언론들이 ‘점거하라’ 캠프에서 ‘성희롱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도하고 정부가 폭력 탄압으로 운동을 가라앉히려 하지만, ‘점거하라’ 운동은 결코 꺾이지 않고 있다.



사진 출처: Jen Corbett

10월 15일 오를랜드 ‘점거하라’ 시위 전 세계 민중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 시위는 결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하버드대학교와 UCLA 등 대학 캠퍼스가 ‘점거하라’ 운동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 곳곳에 ‘점거하라’ 캠프장이 들어서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캠프에 이집트 혁명가들이 지지방문을 가기도 했다.

무엇보다 ‘점거하라’ 운동은 그 정당성과 대의에서 이미 기존 체제와 이념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버드대 학생들이 《뉴욕경제학》의 저자인 맨큐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고 월가 시위 동참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최근 아팩 만찬장에서 하와이의 인기 대중가수인 마카나가 “알로하하며 점령하라”라는 티셔츠를 입고 “우리는 다수라는 노래를 불러 오바마 등 각국 정상들을 당황하게 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마카나는 정상들의 어색한 반응을 무시하고 “우리는 거리를 점령할 거야. 우리는 법원을 점령할 거야. 우리는 당신들의 사무실을 점령할 거야. 당신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명령대로 행할 때까지” 하며 노래했다.

‘점거하라’ 운동은 미국과 전 세계 민중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상처 입은 야수를 몰아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찰 공격에 분노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점거하라’ 운동을 시작한 뒤부터 우리는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리라고 예상했어요. 따라서 이번 공격은 부분적으로만 ‘뜻밖의 일’이었죠.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바로바로 전달하는 긴급 대응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돼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근처의 폴리 광장에 모여 앞으로 무엇을 할지 논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11월 17일 시위에 더 많은 사람을 동참시키려고 두 배로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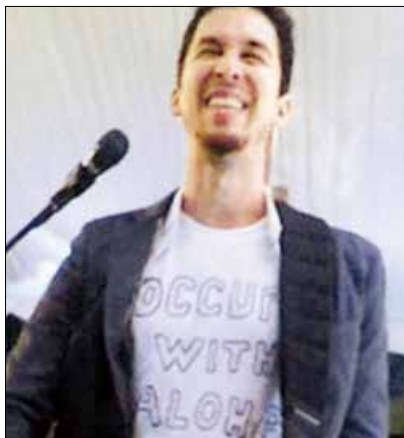
그 날 대규모 동조 파업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날 월가 금융의 정상 활동을 멈추고 점거를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11월 17일 학생들도 대규모 수업 거부를 벌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같은 날 오후 시위를 벌이면서 우리의 목표를 천명하려고 해요.

뉴욕 사람들은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

을 적극 지지했어요. 우리 소모임들은 뉴욕 시의 5대 구에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선동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캠퍼스와 지역 사회와 작업장에서 사람들을 조직하려고 매우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수십만 명이 급진적 활동에 관한 ‘즉석 강좌’를 이수했죠.



아팩 만찬장에서 “알로하하며 점령하라”라는 티셔츠를 입고 노래를 부른 가수

뉴욕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거하라’ 운동에 의해 정치화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집단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찰 폭력은 정부와 기업이 비폭력 직접 행동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겁먹었죠.

1퍼센트는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나서는 것보다는 “민주주의인척 하는 것(demo-crazy)” — 점거하라 참가자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 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 이 현 경제 체제는 상처 입은 짐승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모아 이 짐승을 몰아내려 합니다.

코너 토마스 리드 월가 ‘점거하라’ 운동 참가자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김용욱

문영복 한진중공업지회 수석부지회장

“희망버스가 승리의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간의 정리하고 철회 투쟁을 돌아봤을 때, 한진중공업처럼 ‘1년 이내 재고용’이라는 성과를 낸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명시적인 정리하고 철회가 아니고 퇴직금 정산에서 불이익을 보는 조합원들이 있다는 점이 걸리기는 하지만, 사실상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승리를 얻기까지, 김진숙 지도위원의 목숨을 건 크레인 농성 투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연대로 ‘희망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희망버스가 없었더라면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민주노조의 생명도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2차 전국노동자대회와 6차 희망버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 월가 점거운동 등에서 드러난 자본에 대한 비판 분위기도 승리하는 데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희망버스의 힘을 느낀 것은, 투쟁에서 떠났던



동지들이 다시 뭉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였습니다.

희망버스 운동이 없었다면, 노동조합 운동이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위협해지는 상황까지 갔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희망버스는 민주노총·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결속에도 한 구실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하청 노동자들과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투쟁하지 못한 것은 정리해고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연대해 한진자본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희망버스 동지들, 전국의 동지들, 지역의 동지들에게 굉장한 큰 빛을 쬔습니다. 앞으로 한진중공업지회 집행부는 정치투쟁에 적극 나설 의무가 있습니다.

적잖은 노동자들이 한미FTA 같은 정치투쟁에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투쟁이 노동자들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어려운 곳이 있으면 도움을 줘야 합니다. 57명을 정리해고한 풍산미이크로티도 한진중공업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정리하고 철회 투쟁이 시작됐을 때, 한진중공업에선 이 투쟁이 이기리라고 자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쌍용차를 떠올리며 강하게 싸우면 진다고 비관했습니다.

그러나 투쟁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끝까지 연대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뷰·정리 소은하

계간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1호 2011년 가을

www.marx21.or.kr

11호 2011년 가을

가격: 16,000원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한 강연

오늘의 정치 전망과 혁명적 전략·전술

자본주의의 대안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쟁점 I

통합진보정당과 국민참여당 _ 김하영

금융 위기와 민스키 _ 이정구

발전국가론과 한국의 산업화 _ 강동훈

쟁점 II

인종차별과 다문화주의의

변모하는 인종차별 _ 리처드 시모어

문화와 다문화주의 _ 캐리슨 켈킨스

세계관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와 생태학 _ 김충환

마르크스주의의 고전 읽기

VI 레닌의 《국가와 혁명》 _ 차승일

서평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지역 대안론의 의미와 한계 _ 정병호

피드백

사노위 실패의 교훈과

혁명당 건설 투쟁의 연속성 _ 이형로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마르크스21》의 지속적 발간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www.marx21.or.kr)에서 휴대문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